

第302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8月19日(金)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10회계연도 결산 및 현안질의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審査된案件

1. 2010회계연도 결산 및 현안질의 1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환경부 소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 심사와 현안질의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심사 및 현안질의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상청 소관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장 김성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과 현안질의,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존경하는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

1. 2010회계연도 결산 및 현안질의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환경예산은 기후변화 대응, 폐자원재활용 및 에너지화, 4대강을 비롯한 전국 하천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 복원, 생물자원 관리, 환경기술 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아토피·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노출된 석면을 비롯한 위해물질 관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환경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는 2009년 경기회복 추세를 유지하고,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0년 상반기에 주요 사업비의 60% 내외를 조기집행하여 일자리 창출 등 민생사업의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환경부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환경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선 현장 점검으로 집행부진 사업 원인분석과 대책 강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여진으로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 세입인 각종 부담금 수납률 정체가 지속되어 재정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정부재정의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위축된 국내 시장의 투자 촉진과 민간 참여 유도 등 어려운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예산의 합리적·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총 4조 864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3조 9641억 원 수납으로 81.5%의 수납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4조 9018억 원의 94.7%인 4조 640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501억 원이 이월되고 112

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149억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 발생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역 인근 주민들의 식수 불안 해소를 위한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108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 8월에 발생한 천연가스버스 용기파열 사고 관련 노후 천연가스버스 조기교체 보조금 지원과 2010년 7월에서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환경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6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4대강 수계관리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으로 9138억 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중 91.0%인 8318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지출은 계획현액 8105억 원 중 96.9%인 785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68억 원을 이월하고 84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상세한 보고에 앞서 지난 제301회 6월 임시회 보고 이후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간부입니다.

윤종수 차관입니다.

정연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찬희 녹색환경정책관입니다.

오종극 상하수도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소속 기관장으로 김삼권 국립환경과학원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용진 국립생물자원관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윤승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입니다.

(소속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4대강 수계관리기금 결산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부장관 유영숙 감사합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정연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 및 인원 현황, 세입·세출

결산 총괄, 회계별 결산, 예비비, 4대강 수계관리 기금 결산, 국유재산, 채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환경부 본부는 2실 3국 7관 1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청으로는 기상청, 소속기관으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13개 기관이 있으며, 소속기관 중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10년 7월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 세입 예산액 3조 9651억 원이며, 전년 대비 3.7%인 152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징수 결정액은 4조 8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인 14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납액은 3조 9641억 원으로 81.5%의 수납 비율을 나타냈으며, 전년 대비 0.6%p 감소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불납결손 비율은 0.5%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8772억 원으로 전년 8511억 원 대비 26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 비율은 전년 대비 0.6%p가 증가한 18%였습니다.

다음에는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912억 원이 감소한 4조 5685억 원이었으나, 전년 이월액, 예비비, 타부처로부터의 이체액 등 3333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4조 9018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4조 640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7%를 지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년 대비 335억 원이 증가한 2501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 우선지급에 따른 순차적 이월,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계약체결 등으로 지출되지 않고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12억 원으로 전년 176억 원보다 64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은 없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국유재산 토지사용료 등에서 1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분할납부로 인한 기간미도래 등으로 8500만 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

다.

다음에는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2조 605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에서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발생한 상하수도 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복구 지원에 22억 원 그리고 8월에 발생한 천연가스버스 용기파열 사고 관련 노후천연가스버스 조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에 45억 원 등 총 67억 원의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무총리실로부터 18억 원을 이체받아 예산현액은 2조 6136억 원이 되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도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9쪽은 예비비 및 이체액 사용내역과 지출액 내역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환특회계 세입예산액은 3조 965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조 8633억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중에서 81.5%인 3조 9630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0.5%인 234억 원이 불납결손 처리되고, 18%인 8769억 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수납액 3조 9630억 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법정부담금이 대부분인 경상이전수입이 956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조 6136억 원, 용자원금 회수금 2700억 원, 용자금 이자수입 등 재산수입 688억 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타수입 538억 원 등입니다.

불납결손액 235억 원과 미수납액 8769억 원의 세부내역은 다음 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불납결손액 내역입니다.

불납결손액 235억 원은 대부분 법정부담금인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168억 원, 체납자 무재산 17억 원, 무재산 행방불명 10억 원과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으나 환가 가치가 없어서 공매 등을 거쳐도 실익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39억 원 등입니다.

다음 13쪽,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 8769억 원도 대부분 법정부담금인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주지 불명이 4336억 원, 납기미도래가 533억 원, 기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3047억 원으로 이들 사유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 3조 9651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66억 원, 예비비 67억 원과 이체액 18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4조 1901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93.8%인 3조 9289억 원이 지출되고, 5.9%인 2501억 원은 이월되었고, 112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지출액 3조 9289억 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상하수도사업이 1조 7982억 원, 공단폐수처리시설 등 수질보전사업이 5059억 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폐기물관리사업이 3216억 원, 대기·자연 등 환경보전사업에 6225억 원, 기타 환경보호사업에 680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501억 원과 불용액 112억 원의 상세 내역은 20쪽 및 21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세출결산 집행 내역입니다.

부문별 지출액 내역은 상하수도, 수질 보전, 폐기물 관리, 대기·자연 보전 등 분야별 주요 지출 내역을 구분 정리한 것이므로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 이월액 내역과 이체액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10년 7월에서 9월까지 발생한 집행호우와 제7호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상하수도 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재해 복구를 위해서 각각 11억 원씩 모두 22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월에 발생한 천연가스버스 용기파열 사고에 따른 노후 천연가스버스 조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45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 27억 원은 2010년 7월에서 9월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와 강풍, 제7호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상하수도 시설 등 재해 복구를 위하여 전액 집행되었고, 이월 재원은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자연보전 분야 등에 절감예산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체액은 18억으로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업무가 국무총리실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총리실에서 이체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전용액 내역입니다.

전용액은 183억 원으로 주요 사례를 보고드리면, 하수처리시설 생태독성 저감기술 개발 연구 직접 수행을 위해 상하수도 분야에서 1억 원을 전용 활용하고, 비점오염저감사업의 필요성 등 물환경정책 홍보를 위하여 수질보전 분야 17억 원을 전용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 매립지 내 서울·인천·경기와 설치 중인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이전 편성 예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자치단체이전으로 53억 원을 전용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 대기보전 분야에서 40억 원을 전용 활용하였고, 기타 자연보전 및 환경보호 일반의 경우에도 동일사업 간 또는 유사사업 간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각각 34억 원과 38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에 20쪽, 다음연도 이월액 내용입니다.

상하수도 분야 878억 원, 대기보전 분야 27억 원, 자연보전 분야 660억 원, 환경보호 일반에 931억 원 등 총 2501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전년도 이월사업 우선 지급에 따른 순차적 이월이 1754억 원, 동절기공사 중지와 절대공기 등 기간 부족이 673억 원, 계약 체결과 설계지연이 73억 원 등입니다.

다음에 21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상하수도 분야 3억 원, 대기보전 분야 7억 원, 자연보전 분야 16억 원, 환경보호 일반 해서 83억 원 등 총 112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 88억 원, 소속기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에 따른 인건비 지급 잔액 114억 원, 습지보호지역 내 토지소유자 매도 포기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 22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당초 세입 예산액은 없었습니다마는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정산잔액, 이자수입으로 11억 3200만 원의 징수결정액이 발생되어 82.3%인 9억 3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3쪽, 세출입니다.

농특회계 예산현액은 1151억 원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050억 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1억 원 등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24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광특회계는 종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2010년부터 명칭을 변경한 회계로 당초 세입 예산액에는 없었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 사업의 정산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1억 1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5쪽, 세출입니다.

광특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082억 원의 예비비가 증액되어 5965억 원이 되었으며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1082억 원은 2010년 1월, 4·5·6월, 11월, 12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살처분 매몰지역 인근 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 상수도 사업에 4994억 원, 폐기물 관리 11억 원, 자연보전 사업에 888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71억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6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1149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된 67억 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082억 원입니다.

배정내역은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살처분 매몰지역 인근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등 상수도사업에 1081억 원, 2010년 8월 발생한 천연가스버스 용기파열 사고 관련 노후 천연가스버스 교체 보조금 지원 45억 원, 그리고 7~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환경시설 피해 복구비 22억 원 등입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7쪽입니다.

일반회계 배정 예비비 67억 원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었으며, 전입된 예비비는 상하수도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피해 복구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용기파열 사고에 따른 노후 천연가스버스 조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배정된 1082억 원은 2010년 1월부터 발생한 구제역 가축살처분 매몰지역 인근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9쪽부터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을 보면 수입 계획액은 전년 대비 556억 원이 감소한 7895억 원이며, 징수결정

액은 9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액은 83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수납비율은 전년보다 0.3%p 감소한 91%였습니다. 불납결손액 7억 원은 전체가 물이용부담금 장기 체납에 따라 발생하였고, 체납자 무재산 1억 원, 소멸시효 완성 4억 원, 기타 사업자 부도·파산 등 2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고, 납기미도래 642억 원, 상수도사용 세대별 체납액 166억 원, 지자체 정산잔액 미반납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에 30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액은 전년 대비 556억 원이 감소한 7895억 원입니다. 전액 이월액 160억 원 등을 포함한 210억 원이 증액되어서 계획현액은 8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851억 원으로 계획현액 8104억 원 대비 96.9%를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주민지원사업에 1264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3805억 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1720억 원, 오염총량관리에 150억 원, 기타 수질개선 지원에 659억 원 등입니다.

이월액 169억 원은 토지매매대금 미지급금 및 매수건물 철거비용 등 지급시기 미도래가 156억 원, 연구용역비 지급시기 미도래가 13억 원입니다.

불용액 84억 원은 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 사업 등에서의 집행잔액 65억 원, 오염총량관리, 토지매수사업 계획변경에 의한 불용이 12억 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인력 증원 및 기준호봉 미달에 따른 임금지급 잔액 6억 원, 주민지원사업 소송판결 지연에 따른 불용 1억 원 등입니다.

다음 31쪽에서 34쪽까지는 4대강 수계기금별 집행 상세 내역이므로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쪽 국유재산, 채권입니다.

일반회계 국유재산은 대부분 국립공원관리공단 재산으로 2009년 말 444억 원이 었습니다. 2010년 말 462억 원이 되어 1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립공원 야영장 신축과 관리사무소 증축 등 탐방인프라를 확충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국유재산은 2009년 말 8398억 원이었습니다.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부지 토지 매입과 국립생태공원 건립사업 부지 매입,

그리고 왕피천환경출장소 청관사 신축부지 매입 등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1조 9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국유재산은 2009년 말 8602억 원이었습니다.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건물 매입 등으로 398억 원이 증가되어 2010년 말 현재액은 9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은 4대강 수계기금별 국유재산 상세 내역이므로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쪽 채권입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일반회계 채권 현재액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소유 국유재산 토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등 8500만 원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은 2조 5306억 원으로 법정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8749억 원, 상환기한 미도래 용자회수금이 1조 6542억 원, 기타 10억 원입니다.

다음에 40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은 2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수입 미수납액입니다.

41쪽 4대강 수계관리기금 채권 현재액은 813억 원으로 물이용부담금과 사업비 정산금액인 기타 경상이전수입에서 발생하였으며 한강 482억 원, 낙동강 180억 원, 금강 83억 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 68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환경부장관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기상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에 기상청에서는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왔고 2012년 기상 기술력 수준 세계 6위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미래지향적 국가 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선진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역대 최고 국민 체감 만족도와 대국민 기상서비스 만족도를 달성하였으며 기상레이더센터를 신설하여 범국가적 기상·강우 레이더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독자 기상위성인 천리안 위성의 성공적 발사와 슈퍼컴 3호기 도입을 완료하는 등 선진 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32차 IPCC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 확보와 국격 제고에 기여하고 초단기 예보서비스 제공, 태풍 예보기간 확대 및 기상특보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위험기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산업진흥법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상기술 민간 이전을 통해 국내 기상산업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상서비스 산업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상예보의 선진화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보 정확도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부터 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액은 21억 7200만 원이었으나 항공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19억 5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18억 5700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액은 전년 대비 10.1%가 감소되었으며 구상금 등 1억 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출 예산현액은 2500억 원이며 이 중 94.0%인 2350억 원이 지출되었고 113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3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프로그램별로는 기상예보 부문에 284억 원, 기상관측 부문에 279억 원, 기후변화과학 부문에 37억 원, 기상산업정보 부문에 173억 원, 지역 기상서비스 및 기상연구 부문에 308억 원, 책임행정기관 운영 부문에 97억 원, 기상행정 지원 부문에 117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 개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0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채권·물품 및 국유재산 현황, 종합평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요약해서 간단히 좀 보고해 주십시오.

○기상청장 조석준 예, 알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쪽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결산 개요의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1억 7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2억 원 적은 19억 60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습니다.

2010년도 수납액 18억 6000만 원의 주요 내역은 기상지진연구개발사업 출연 정산금 등 경상이 전수입이 3억 3000만 원 등입니다. 그 밖에 항공기상정보료 등이 13억 8000만 원, 관용차량 매각대가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쪽 세출결산입니다.

6쪽의 일반회계표는 참고하시고, 다음 7쪽에서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은 2426억 원이었지만 슈퍼컴센터 신축 지연 등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22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448억 원이 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44억 원이었으나 혁신도시 부지 조성 차질로 전년도 이월액이 8억 원이 증액되면서 예산현액은 52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8쪽의 신규사업 및 종료사업, 9쪽부터 11쪽까지의 세입결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의 세출결산 내역은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예보 부문의 지출 내역은 슈퍼컴 3호기 및 서초동 통신센터 임차료, 슈퍼컴 2호기 유지·보수 등 슈퍼컴 운영에 227억 원 등이 소요가 됐고,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등에 52억 원, 국가태풍센터 운영 등에 5억 원 등 모두 284억 원입니다.

기상관측 부문 지출 내역은 모든 사업에 총 279억을 지출했습니다.

기후변화과학 부문은 기후변화감시사업 등 모두 3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기상산업정보 부문 지출은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 사업 등 모두 17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밖에 기상연구 부문 지출 내역은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 등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에 133억, 그리고 선진 기상기술 및 실용화기술 개발사업 등에 모두 265억을 지출하였습니다.

끝 부분으로 기상행정지원 부문에서는 인건비 577억 원, 기본경비 180억 원 등 모두 115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은 기상관서 증가 및 장비 확충에 따른 지방청 회선료 등 공공요금 부족과 일용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부족으로 총 3억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20쪽의 전용액 보고입니다.

전용액 내역은 슈퍼컴 2호기 활용방안 연구개발비 등에 3억 원, 기상레이더센터 신설에 따른 지방청 인건비 예산을 본청으로 이관한 13억 원,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여비 등 4억 원, 끝으로 기상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의 진흥원 위탁 등 모두 299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이월액 내역입니다.

해양기상관측선 건조업체의 지속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공정 지연으로 42억 원, 그리고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 협의 및 동절기 한파에 따른 부분으로 17억 원, 보령기상대 청사 신축 등으로 5억 원, 모두 8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4쪽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모두 36억 원이 되었습니다.

25쪽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모두 51억 9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부지조성 차질로 인해서 시설비 및 감리비 31억 3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6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1억 원의 채권 현재액이 되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현재 물품 보유는 2009년도 말에 1142억 원이고 2010년도에 슈퍼컴 3호기 등 물품이 542억 증가해서 모두 1684억 원입니다.

28쪽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국유재산은 3208억 원이 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 2010년도 세입수납액 19억

원이고 미수납액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문은 2010년도 세출예산 현재액이 2500억 원이고 2350억 원을 지출하고 113억 이월, 37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1쪽 이후의 참고자료인 '2010년도 정책추진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기상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0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2008년 회계연도부터 연례적으로 자금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여 왔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1754억 원은 자금 없는 이월로서 이는 국가재정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으로 수납률이 45%로 저조합니다. 경유자동차 성능 개선 등에 따른 납부 저항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하수도 부문 중 지역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의 심의 없이 추진한 것으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인처리시설 확충사업은 환경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30%로 극히 저조합니다. 적정 규모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수질 부문의 경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 부문의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도 심의·확정된 내용과 달리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남 여수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은

당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연도 중에 12억을 내역 변경 증액을 통하여 집행하였는데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 부문에서는 수도권대기개선 추진대책사업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사업의 목적과 다른 내용의 홍보비 등의 집행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 중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사업을 연도 중 포기하여 전액 전용 감액된 것은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 부문에 있어서는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사업의 경우 생물자원 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연구개발비를 WCC 사전 준비를 위한 사업에 집행하였는데 시정이 필요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사업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과 경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사업비를 축소 집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있어서는 환경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시 계상되지 않은 온실가스관리사 자격제도 도입기반 마련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 목적과도 부합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동북아 한중일 환경협력사업은 사업 목적 외로 집행된 내역이 과다합니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의 응시자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면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측정 장비를 활용하는 교육을 확대하여 측정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을 국립환경과학원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입니다.

기상기술개발, 지진기술개발, 기후변화감시·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사업은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기술개발로 보기 어려운 과제를 집행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연구소 R&D사업 또한 사업 목적과 괴리되는 집행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및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기관에 대하여 결산 관련 질의와 현안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첫 번째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容九 委員**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국의 아연도강관 사용 가구의 경우 부식으로 인해 녹물 출수 등 수돗물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대부분 식기세척·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매칭으로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7억인데 이에 따라 2009년과 2010년 각각 11억 4000만 원씩 22억 8000만 원을 확보해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실질 집행률을 보면 경북 영양군은 6900만 원 중 69.6%인 4800만 원, 경북 예천군은 49.2%인 3000만 원, 전남 구례군, 대구 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안성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저소득층의 옥내급수관 개량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빨리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실행이 안 되고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빨리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존경하는 김용구 위원님, 확정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하고 연간 지원 예산액도 증액해서 사업기간의 단축이 필요합니다.

2010년의 경우 총 18개 지자체에 11억 4400만 원을 지원해서 6개 지자체는 6500만 원을 제외한 전체 지원액 94%, 즉 10억 798만 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지자체 사업비가 이월되

고, 집행이 좀 지지부진하고,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11억 4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특히 저소득층 관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의 경우는 대폭 증액이 필요합니다. 예산 증액을 위해서 지자체를 독려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0% 지방비 부담으로 지자체에서의 예산 신청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규모로 예산을 지원할 경우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장기간의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容九 委員** 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상수 유수율이 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못 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후관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재정자립도 30% 이하, 생산원가 전국 평균 이하, 유수율 70% 이하, 수도요금에 의한 원가보전을 90% 이하, 급수인구 10만 명 미만, 수도사업 통합 의지 등 여섯 가지 기준 하에 11개 권역별 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2010년도 환경부 예산 352억 9300만 원 중 지자체가 실제 집행한 예산은 221억 3700만 원으로 62.7%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주시·영천시·영암군의 경우는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고 목포시·강진군·완도군·해남군·영덕군·울진군 등 6개 지역은 예산 집행률이 없습니다.

동 사업의 실질 실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가 발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통합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지방의회, 주민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국고보조율이 지자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30%±20%p고 또 보조율이

낮아서 지방비 부담이 과다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容九 委員** 예, 지금 현재까지 통합 운영을 실시 중이거나 통합 실시 협약이 체결된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경남 남부의 경우는 4개 지자체로 고성·거제·통영·사천의 경우는 2010년에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전남 남·서부의 경우에는 5개 지자체입니다. 강진·장흥·신안·완도·진도, 그리고 강원 남부의 경우는 4개 지자체 태백·정선·영월·평창이 2010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후에 후속조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2009년 누수율이 20%를 초과하는 시도는 전남이 23.2%로 가장 높고, 경북이 22.8%, 강원이 22%, 경남이 21.6%, 전북이 20.8%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일수록 누수율이 높습니다.

또한 이들 시도의 생산 원가율도 전국 평균 761.6원을 크게 상회해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충분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잘 실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유인책이라도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사업을 보면 국고하고 매칭 비율이 50%에서 80%까지 되는데 이거는 30%에서 20%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고보조를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 좀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유영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김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뭐 기관총을 난사하는 소리 같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 뭐 공사하는 모양인데……

국회사무총장께서 신경 좀 썼으면 좋겠네. 지금 올라가서 좀 중단시키라고 올려 보냈습니다.

이거 계속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네.

○**이미경 위원** 그냥 합시다.

○**위원장 김성순** 그냥 할까요?

○**강성천 위원** 예.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그냥 하실까요?

○**강성천 위원** 예.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천 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입니다.

장관님, 환경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환경부 자체 세입예산 중에 법정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62.9%입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다면 환경부 예산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환경부 소관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이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위원님, 적극 동의합니다.

○**강성천 위원** 2010년 환경부의 주요 법정부담금 수납을 조사해 봤습니다. 환경부의 재정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지자체별로 주요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전국 지자체의 수납률 자료를 취합해서 본 결과, 경북과 15개 특별·광역시 수납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수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북으로 78%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32%로 가장 낮아 두 지역의 차이가 무려 46% 이상이 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지자체별로 주요 환경부담금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입니다. 아마도 각 지자체별로 업무 여건이나 업무 담당자의 징수 노력 등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잘 보십시오.

법정부담금이 세입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납의 안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징수 대행자인 지자체가 수납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맞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적극 동의합니다.

○**강성천 위원** 수납률이 높은 지자체에 징수 수수료율을 높여 주는 인센티브제도가 법정부담금 중

환경개선부담금만 있습니다.

장관님, 다른 법정부담금도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맞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징수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 즉 징수 기준을 60%를 초과하면 기준 징수비용 징수액의 최대 30%까지도 추가 징수율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는 징수율 60%를 초과한 총 1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약 13억원의 추가 징수비용을 교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에 추가 징수비용 교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서 징수율 제고가, 효과가 높을 경우 환경개선부담금뿐만 아니라 타 부담금에도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예, 꼭 그래서 재정의 효율을 높여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요 2009년에 건립부지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못한 국가습지건립센터가 있습니다. 장관, 맞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강성천 위원 그런데 2010년에 해당연도 사업비는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고 전년도 이월액 3억 8000만 원만 집행됐는데 장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2009년에 예산 집행이 안 됐고 2010년에도 예산 집행이 부실한 사업인데 환경부가 사업관리를 하지 못한 거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일부 습지보호지역 인근의 부지 선정을 하느라 좀 일정이 순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부지가 변경되고 설계의 착공이 순연돼서 일부만 집행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잘 진행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7월 현재 예산 집행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장관님, 금년 12월에 이 사업을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월 현재 2층 골조가 공사 중이고 8월에는 3층 골조가 진행이 돼서 약 41%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10월 철골공사, 내·외부 미장공

사 등을 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국가습지센터 건립사업의 집행률이 지극히 저조한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예산을 쥐서 집행을 하라고 충분한 시간 여유까지 줬고 그리고 환경부가 계획까지 내서 한 사업인데 어찌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보호지역 인근의 민감지역에서 아마 사업이 추진돼서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문제가 있는 사업을 관리해서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예산집행 부서가 하는 일 맞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맞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다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앞으로는 그런 면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상하수도 시설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하수도 시설 재해복구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은 완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자체의 실지 집행을 보면 평균 25.3%로 저조합니다. 즉 환경부 교부 집행률이 100%이지만 피해주민이 혜택을 보는 실지 집행률은 지극히 저조하거든요.

장관님, 본 사업에 참여한 13개 지자체 중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시와 임실군, 전남 신안군의 경우 예산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집행 부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연말에 예산이 배정돼서 실시설계 기간이나 또 동절기의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1년 7월 말 기준으로 9월에 완료하기로 환경기도 광주시를 제외한 12개 지자체는 전액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강성천 위원 환경부는 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점검이나 원인 파악 등의 능동적인 조치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저희는 분기별로 집행 실태를 점검을 합니다. 이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요령에 따른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교부만을 가지고 사업의 예산집행을 평가하는 것보다 사업 시행주인 지자체의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도 자체 집행률보다는 지자체에서 실제 집행된 그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예, 본 사업은 실지 집행률이 부진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장관님,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말씀하신 대로 실 집행실적이 부진하지 않도록 예산이 이용·전용되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교부 전에 지자체가 실시설계 등을 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장관님, 2010년도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때도 비점오염저감사업을 가지고 4대강 홍보사업에 전용했다는 게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이 410억으로 굉장히 늘어났는데, 200억이나 증가되고 홍보로 책정된 예산이 15억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15억 원은 또 4대강 홍보예산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제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당시에 문정호 차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계획되어 있을 때마다 상임위에 보고하고 또 상임위가 안 열릴 때는 위원들 개개별로 찾아뵙고 그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2010년 11월 달 예결소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요하게 결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사업비 15억 중에서 14

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상임위에 단 한 차례도 보고된 바가 없어요. 회의록 모두 살펴봤는데도 없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선 약속을 안 지켰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차관이 부대조건까지 달고 4대강 홍보예산이 아니라고 장담했던 이 15억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결국은 이게 4대강 홍보사업에 사용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국회에서 명백하게 예산 심의할 때 “2010년도의 전철을 밟지 마라.” 하고 부대조건까지 달아가고 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 사업들에 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장관님!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이미경 위원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15억 예산 가지고 썼던 내역들, 세부계획들, 결과물들을 바로 제출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왜 지금 결산 심의하면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겨우 한 장짜리 만들어 가지고 오늘 새벽 2시에 갖고 왔어요. 이걸 풀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다루겠으니까 보시고……

우선 부대조건 사용할 때마다 국회에 와서 보고하겠다고 한 것 안 지킨 것,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얘기하십시오.

모르고 계셨어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비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전체 좋은 물 그러니까 물환경 관리 교육·홍보비로 사용을 한 것으로……

○이미경 위원 저기요, 장관님, 지금 시간 자꾸 가는데요.

우선 이 사업비가 4대강 홍보사업비에 쓸 수 있는 요소가 크다, 그래서 “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와서 쓸 때마다 그때그때 보고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14억 다 쓸 때까지 한 번도 보고 안 했다는 건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셔야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인정 안 했지요?

○**위원장 김성순** 아니, 잘 모르시면 나중에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미경 위원** 인정 안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건 국회에서 부대조건까지 달고 했던 국회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4대강 예산에 안 썼다라고 뭐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면 분명한 자료를,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 아셨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예.

그다음 충전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 예산도 4대강 중점권역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지금 3065억 원인데 이게 이렇게 많아져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예산은 많은데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

그런데 이 예산 그냥 그때 날치기로 통과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사업기간, 사업물량 검토 없이 통과됐어요. 1344억 원이라는 돈이 통과됐는데 지금 38.2%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시다. 우선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이것 검토하셨어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자세한 숫자는 제가 잘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이미경 위원** 아니, 숫자는 그냥 들으십시오.

38.2%밖에 안 됐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예산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이 조금 집행된 것 차라리 잘됐어요. 효율성이 낮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38.2%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8%의 집행은 아마 2010년도 집행률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70% 이상 지금 집행이 돼서 아마 초기에 설계변경이거나 공법 선정, 이런 것으로 조금 미진하지 않았을까……

○**이미경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의 실질집행률이 61.8%고 이 중에 충전시설의 실질집행률은 38.2%예요, 충전시설에 대한 건.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2010년도에 그렇

게……

○**이미경 위원** 이게 2010년도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2010년도 결산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10년도 결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이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줄속적으로, 국책사업이다 하고 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행정절차 5개월 정도 밟고 설계하는 데 5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첫해에는 설계비 반영하고 다음 해에는 시설비 반영해야 되는데 이걸 2개를 한꺼번에 해 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 감당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단일연도 예산으로 사업비 전액을 교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이렇게 4대강 사업에 연관된 지적이 총인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냥 여기에 예산을 막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덜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는 간단한 거니까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이미경 위원** 아까 김용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노후상수관 개선사업 또 열악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고 국고보조율은 30% 이하로 이 사업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충당되기가 힘들다.” 이런 지적을 하셨지요, 아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이미경 위원** 그러면 개선책을 뭘 가질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 답변에서도 뾰족한 개선책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검토했을 때는 우선은 국고보조율 30% 이하, 지금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한 곳은 재정자립도가 최소 9.18%, 최대는 35.5%,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

고 하는 그러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기재부 등하고 논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경우에 이걸 광특회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시도별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요. 그래서 이걸 광특회계로 하지 말고 국가직접 편성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 사업들은 꼭 필요한데 그래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장관님께서 기재부장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십시오. 우리도, 저도 예결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셔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니까 이걸 좀 제도개선을 합시다.” 이렇게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12년도 상수관망 예산 신청을 할 때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것을 저희도 신청을 했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대폭 상향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이미경 위원** 아까 광특회계에서 국가직접 편성사업으로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노력해서 내년에는 이게 지적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보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 예, 이정선입니다.

환경부의 자산성 물품비하고 소모성 물품비 지출현황을 보니까요.

12월에 집행된 금액이 전체의 34.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38억 1169만 원 중에 12월에 집행된 금액이 13억 214만 원으로 34.2%에 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12월 달에 집

중적으로 소모성 물품비, 자산성 물품비가 쓰여진다고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급한 현안업무 처리를 먼저 하고 물품구매 예산이 주로 연말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예.

살림에 있어서 일단 뭐 가정 살림도 1년 예산을 규모 있게 짜서 써야만 정말 알뜰한 예산을 쓸 수 있듯이……

지금 이게 한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더구나 또 더 재미있는 사항을 보니까 12월 28에서 31일까지 4일 동안 쓴 게 무려 6억 8500만 원, 예산의 18%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들을 썼는데 이렇게 예산을 썼나, 이런 예산을 썼나, 정말 불가피한 예산들인가라고 봤더니, 물론 장관님이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셨지만 그 내역을 보니까 노트북, 카메라, 프린터기, 텔레비전, 의자, 파티션, DVD, 자료집……

이 내용을 보면 장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규모 있는 내용이라는 부분하고 좀 배치되는 사항이 아닌가, 언뜻 제 생각은 남아 있는 예산을 빨리 써 버려야 다음 예산을 받을 때 유리하다, 이 예산을 빨리 써 버려야 된다는 좀 소모성, 그야말로 전혀 필요하지 않은, 다음에 사용해도 되는 예산을 써 버리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유영숙** 제가 자세한 내용을 사실은 못 봤기 때문에……

○**이정선 위원** 예, 잘 모르시겠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이정선 위원** 이런 일이 내년에는 없도록……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이정선 위원** 역시 기상청 청장님!

○**기상청장 조석준** 예.

○**이정선 위원** 마찬가지로입니다. 기상청은 조금 더 심합니다.

2010년 12월에 집행된 금액이 무려 44.7%, 50% 가까이 되는 예산을 12월에 집중적으로 써 버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 후반부에 좀 많이 쓴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전체 예산의 50%를 12월에 한꺼번에 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을 하시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다 쓰셨나 봤더니 이것 역시 제가 환경부에 지적한 것과 비슷합니다.

아직 건조되지도 않은 배의 기름을 사 뒀다가 뭐 선박 직원 피복비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썼습니다.

물론 아직 확인을 못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작년도 예산 결산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알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예,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환경부장관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을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700만 원밖에 불용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부된 지자체나 민간 교부된 사용액을 보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56.3% 밖에 안 썼고요.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 확충사업은 78%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은 65.9%, 이렇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자체 자체에서는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보고받은……

○**이정선 위원** 이렇게 지자체 사업이 보조적인 사업 성격으로 집행률이 거의 30.7%에 불과한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환경부가 긴밀한 검토, 지자체의 의지, 이런 것들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유영숙** 향후에는 예산이 편성될 때 사업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똑같은 대답을 내년에는 안 들었으면 싶습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24개 사업을 증액했고 21개 사업을 감액해서 총 45개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좀 위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공단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동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런 경우도 환경부에서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이 가동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결산에 나오시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가동률이 아마 70% 정도로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12년부터 이제 하수슬러지 폐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정선 위원** 70%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30% 되는 곳도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 슬러지 폐기 바다에 안 되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준비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장도 함께 올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강성천 위원님이 지자체별 단계별 교부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점검이라든가 평가가 반드시 지자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죄송합니다만 잘 못 들었습니다.

○**이정선 위원** 지자체에 교부되는 교부금이요, 이것이 평가라든가 검증이 돼서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그다음에 뭐 깎든지, 단계별 교부를 하시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쓰여지지도 않고 또 불용이 되고 다른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정선 위원님 꼼꼼하게 잘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의 선거구인 경기도 광주시 수해 때 우리 환경부장관께서 오셔서 둘러보시고 특히 하수처리장 복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기상청장께서도 복구현장에 직접 와서 노력봉사까지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뭐 예결위위원이라서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우선 자료를 좀 얻고 확인하는 수준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부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부터 개선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법정부담금 징수율 계속 떨어지고 이래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이 대책을 세우는 일이 나는 이 예산·결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결위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내주시면 예결위에서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인시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께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총인시설을 설치하는 각 하수처리장별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씩 앞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그 비용을 지자체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부가 보전을 해 줄 것인지 하는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의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들, 몇 가지 사업의 중요한 이유는 지방과의 비용분담 관계 때문에 항상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부가 하는 여러 시설들이 그 지역에서 뭐 환영해서 유치하는 시설이 아니고 대개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시설인데, 그것도 또 지자체에다가 부담금을 떠넘기고 관리를 떠넘기고 이러니까 이게 참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인시설, 좋습니다. 필요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얼마나 부담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내주시면 예결위에서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런던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해양 배출을 이제 내년부터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해양 배출 금지하면 대개가 다,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소각으로 많이 가는데 이 소각으로 갈 때 비용이라는 게 해양 배출과 소각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결국 이거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각 지자체가 얼마만큼의 부담이, 증액이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또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고……

나는 런던협약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해양 배출을 금지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지 않는데 우리 환경부는 굉장히 그것을 강고하게 해석을 해 갖고 2012년까지 완전 중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국제협약은 물론 지켜야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고 또 그게 조약의 정신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던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와 또 연도별 어떤 목표를 갖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정책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는지도 함께 좀 자료로 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보고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계기금에 관해서, 기금도 하나 있으니까 질문을 해야겠는데, 한강수계기금을 대표적으로 보면 지출액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지원사업에 675억 원, 환경기초시설에 1920억 원, 토지매수·수변관리에 94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출발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했느냐면 주민지원에 한 덩어리 또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한 덩어리 또 토지매수 등에 한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3등분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보면 주민지원사업비가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고 이럼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것도 ‘공동사업비 등의 비율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한계를,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이거는 어떤 배

분에 의해서 하는지 그 기준도 좀 제시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매해년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지원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왜, 정부가 규제를 해서 이분들에게 손실을 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지, 그 규제를 없애고 주민사업비 안 받겠다, 이게 대세지요. 그 주민지원사업비를 시혜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결위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늘 많이 나오는 게 유사·중복 사업이 많다, 이런 걸 얘기하는 중에 환경부가 또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하천과 관련해서 생태하천 관리나 이게 고향의 강 사업이나 그래 갖고 국토해양부하고 늘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갖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아까 보고를 받다 보니까 황사와 관련해서 저는 뭐 내용을 여기에 몇 년 없어서 몰랐습니다마는 황사집중관측소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전용했다, 뭐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제주도의 황사집중측정소 부지. 뭐 그걸 거기에서 잘못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또 우리 기상청의 보고에 보면 황사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사감시망 확충, 황사예측시스템 개선·운영” 그래 가지고 뭐 황사가 지나가는 코스를 따라서 다 관측한다…… 같은 황사를 놓고, 황사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발생하는 거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뭐 부처간에 역할이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 같은 황사를 놓고 두 개의 부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그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양 부처에서 다 개선책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구요.

기상청의 보고에 따르면 뭐 ‘대단히 만족스러운 역대 최고의 국민 체감 만족도를 이루었다, 기상서비스 만족도를 얼마를 달성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시는데, 뭐 저도 기상청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걸 도대체 언제 조사하신 내용인지, 이번 수해 이후에도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개 예보에 관한 한 매해 적중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화자찬 하시는지도

함께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서 현안 문제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질의에서 2008년도 캠프캐럴에서 의문의 드럼통이 발견된 것에 대해 질의한 것 기억하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기억합니다.

○홍희덕 위원 우리 의원실에서 직접 에코솔루션 직원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55갤런짜리 드럼통 10개, 5갤런짜리 드럼통 수십 개를 터파기 공사 중에 발견했다는 내용이고 해당 직원이 얘기하기로는 ‘드럼통이 발견된 지역은 D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여러 정황상 환경부에서는 드럼통을 발견한 구역을 랜드 팜 지역으로 보는 것 맞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홍희덕 위원 본 위원이 미군에게 사실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미군에서 조사결과를 통보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미군 측에서는 해당 드럼통들은 고엽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홍희덕 위원 제가 스티브 하우스 씨하고 캠프캐럴을 방문했을 때 우리 환경부 직원이 그랬어요. 미군은 “빈 드럼통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의원실에서 직접 직원으로부터 들은 진술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미국 극동공병단의 전문환경팀이 보호장구를 다 갖추고 와서 드럼통을 제거했다고 하고 그리고 제거하면서 “무슨 성분이나.”고 했더니 “솔벤트 계열”이라고 얼버무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빈 드럼통이라고 한 게 말이 안 되고 또 장관께서는 빈 드럼통이라고 한 미군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

○홍희덕 위원 못 믿겠지요? 빈 드럼통 같으면…… 그리고 설사 빈 드럼통이라고 해도 문제래요. 그러면 드럼통 안에 있는 물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토양에 또 지하수에 흘러들어 가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빈 드럼통이 다는 아니고, 아마 페드럼통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제조사 라벨도 좀 붙어 있는 그런 드럼통인데 그 발견된 폐기물들은 경기도 시흥 소재에 있는 ‘에코서비스’라는 그런 업체,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홍희덕 위원** 실제로 2008년 에코솔루션이 드럼통을 발견하고 나서 드럼통이 발굴된 토양이 농약류의 유독물질로 오염되었다고 미군에게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 정화작업을 바로 에코솔루션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약류의 유독물질이라는 겁니다. 환경부 조사에서도 확인한 것이 이와 같습니까? 조사하셨잖아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오염된 토양은 아마 그 랜드 팜에서 모두 정화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홍희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농약류 물질이라는 게 조사에서 드러났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면 정화 조치한 그 토양을 오염시킨 물질이 여전히 유독물질임은 명백한 거고 그 드럼통이 고엽제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아직은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홍희덕 위원** 그렇다면 장관님, 2008년 에코솔루션이 캠프캐럴에서 발견한 드럼통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되고요. 미군은 그 드럼통을 어디로 옮겨서 어떻게 처리했다고 합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미군 측의 통보내용이 정확한 건지는 현재 에코서비스, 국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티브 하우스 씨가 매립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 내용에 대해서도 연관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랜드 팜이 D 구역 그 근처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한미 합동조사단이 드럼통이 발견된 랜드 팜 지역까지 토양조사를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8월 말경에 나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래요. 인근 주민들의 여론은 빨리 사실관계를 밝혔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요.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의 걱정을 헤아려서 시급하고 정밀하게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국감 전까지 건강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국민 건강영향조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진표를 작성하거나 문헌조사 조사단 구성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 공동조사단의 토양과 지하수 조사결과 발표가 나는 대로 그 결과 발표와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마을의 해안은 경광만으로 우수한 자연유산이고 생태유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강정마을의 구럼비바위와 멧부리를 모두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쏟아 붓는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장관님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국방부가 제공했다라지만 무턱대고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협의한 환경부가 갈등을 키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장관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강정마을에 가서 조사를 했으면 제안합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주도 강정마을에 우리 장관님과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직접 강정마을에 가서 아름다운 구럼비바위와 멧부리를 보고 주민들도 만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해군기지가 들어서도 되는 곳인지 아니면 대안이 필요한 건지 정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안 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장관님 수용할 의사가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검토 꼭 좀 하셔서 전체회의 전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장관님!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률 낮은 것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자체의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그것을 원인으로 보고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자, 이런 말씀도 있고 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분석한 것은 경우 자동차 성능이 개선되고 그밖에 다른 변화가 생기면서 납부 저항이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일부 그런 경우차들의 기술개발로 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저항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률을 높이려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가지고 동의하신다면 개선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다음에 총인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인처리시설 만드는 게 4대강 사업 진행하고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 총인처리시설 사업을 계획한 것은 2005년부터 하천 정화를 해서 인 수준을 낮추는 그런 계획하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의 경우 OECD 기준이 0.1ppm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16에서 한 0.6까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도 이것을 낮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하에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시다.

○**조해진 위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일부에서 수질이 좀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총인처리시설 강화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다면 4대강 사업 진행과, 4대강은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맞추어서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실적 이 떨어지면 그런 차질은 없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고서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역시 여러 위원님 말씀이 있었던 부분인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공단폐수 처리시설 설치,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자체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게 지자체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사업을 따내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현지에서는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이유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마는 지자체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또 그 필요는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하다는 거잖습니까? 지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필요성을 그렇게 절감을 못 하는 측면도 또 있습니다. 또 당장 그 시설이 들어가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그런데 지자체가 그런 반발을 무마할 어떤 지원이나 보상이나 또 이런 예산까지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었지…… 이 사업 진행할 형편도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중앙정부가 보아도 이것은 또 전국 단위에서 꼭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까지 내려보내 주는 데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막혀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이 계속 불용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하셔서 원인 분석을 해서 가지고 집행률을 높이고 현지에서 그 시설이, 내년부터 벌써 문제가 나타날 텐데, 바로바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자체들과도 협의, 지자체들의 애로도 좀 들어 보시고 해서 한번 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우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보건센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에 지금 12개 국공립병원 또 민간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해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을 한

33억 원을 지원해서 센터로 지정된 병원들이 주로 환경성 질환 관련 환자 DB 구축하고 또 환경요인과 질환과 상호작용 연구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주로 연구 기능, 자료 확보 기능에 가까운 거지요? 임상 기능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초기에는 아마도 그런 DB 구축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어떤 일회성 임상 연구보다는 저희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거점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그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질환과 관계해서 그 병원을 임상적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 지정된 센터를 특정해서 이용하는 실적이 많이 있나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만 지역의 보건센터든지 또는 주민과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 같은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점차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조해진 위원** 실적을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실 이런 병원들은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이용하기 쉽지 않은, 가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데 그 안에 있는 환경센터를 별도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임상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대면 기능이 아니라 그냥 병원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자료 확보하고 하는 것이라면 환경부에서…… 그런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 분야, 환경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환경부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서 활용해도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법관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증액까지 해 놓고 사업 집행

은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증액을 한 것은 아니고 그 내역을 조정한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이법관 위원** 66억을 증액한 것 아닌가요, 원예산보다? 실무자 누구 계세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총인 범위 내에서 내역을 조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이법관 위원** 어디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이것 증액한 것 아니에요?

이따 대답하시고요. 시간 없는데……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상하수도정책관입니다.

증액은 아니고요. 사업 간 내역 조정한 겁니다.

○**이법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잘못 정리가 됐나?

하여간 사업 집행률이 30%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번 4대강 사업 때도 작년에도 그랬고 총인처리시설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사업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이법관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좀 더 확실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아울러서 말이지요, 제가 항상 지적을 하지만 과연 이번 홍수 때 4대강 사업 때문에 큰 덕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민들이 플래카드 걸 정도로 그렇게 덕을 보았는데 문제는 이번에 거기서 홍수 났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여기 야당 위원들…… 다 나가셨네?

(웃음소리)

아마 아주 호재를 만났다고 하고 기다렸을 텐데 이번에 정부가 잘했다는 것 저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천사업 있지요, 지천정비사업? 이것을 같이 하기로 해 놓고서 어찌 말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천 정비가 안 되면 또 문제 생깁니다, 또 문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안 그래도 이제 12년의 예산에 저희가 많이 계획을 해서 넣었습니다만 지금 1차 반영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법관 위원** 이것 괜히 또 당합니다. 또 당해 그러다가, 지천까지 안 해 놓으면. 그렇게 중점적으로 해 놓고 명목상으로 하는 게 되고 실질상 내용 있게 안 해 놓아 가지고 또 당하지 말고 좀 환경부가 중심을 잡고 밀어서 지천정비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그 계획…… 지금 자세히는 제가 묻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앞으로 지천정비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 지금 상당한 사업이 자금 없이 자꾸 이월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이법관 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2500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예상을 해 가지고…… 이게 재정법상 자금 없이 이월하는 게 아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나는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차질 없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다음에 제가 구제역 대책 우리 환노위원회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계속 이 관계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이 있지요, 운영하고 있는 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이법관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대충 246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 관정은 전국에 136만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부실하고 그 운영 실태도 보면 신뢰성도 없고 부실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에 구제역이라는 큰 홍역을 치루면서 지금 침출수 유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전전공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까지 해 주고 하는 판인데.

이 지하수 측정망, 이것을 좀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신뢰 있는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다음에 환경부 직원 뇌물수수 사건이 자주 터지는데, 이번에 낙동강유역청에서도 한 사람 구속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에서. 이

게 5년 6개월인가 거의 6년 근무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일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장관님이 감사 업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이법관 위원** 기상청장, 좀 문졌습니다, 청장님한테.

○**기상청장 조석준** 예.

○**이법관 위원** 요새 언론에 보면 기후가 무슨 우기니 건기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는 그런 저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언론보도가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우기 이런 식으로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겁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 일단 그런 경향이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조짐이 있었고요. 올해가 상당히 뚜렷한데요. 일단 장마 끝에도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것도 전반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성으로 보고 이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정도의 형태가 매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타나는 것을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고 보는 겁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전체는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지금 일부 남해안까지는 이론상으로 아열대화 됐고요. 이미 대구의 사과가 포천으로 올라갔고 농작물이라든가 어군 분포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속도 자체는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최근 10년, 15년 사이에는 뚜렷하고 기상 현상 자체도 최근에 보면 올해 비 많이 온 것이 역대 100년 사이에 두 번째입니다, 서울의 경우.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비가 계속 내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재해예방 기준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망에 언제쯤이면 아열대 기후가 될 것 같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전체로 하려면 그것은 50년, 100년 후고요.

○**이법관 위원** 아, 그래요?

○**기상청장 조석준** 다만 이제 문제는 조금씩……

○**이법관 위원** 대구까지 왔다면서 서울까지 오

는 데 50년씩 걸려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 사이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열대라는 기준이 학문적인 기준이 있고, 우리가 기온이 조금만 높아지더라도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생태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열대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아니더라도 기온 1℃의 상승이 그런 어떤 사과단지든 금방 북위 한 10도 이렇게……

○**이법관 위원** 알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몇 도는 올라갑니다.

○**이법관 위원** 그리고 요새 이상폭우가 말이지요, 희한하게 경상도에 한 번 광 때렸다가 충청도로 갔다가 경기도로 갔다가 호남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때리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주기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뭘 겁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기상청장 조석준** 일정한 주기보다도요, 한국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보통 평균 수명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도 서해상에서 발생해서 6시간 내지 12시간 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곳곳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나타난 현상이라 저희가 가장 빠른, 정확한 예보를 통해서 또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나라가 IT가 강하기 때문에 SNS라든가……

○**이법관 위원** 알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런 것으로 많이 보강해서 빠르게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리고 이번에 홍수 사태 때 우면산 사태가 말이지요. 제가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큰일 날 뻔했는데, 한 블록 떨어진 데에서 발생을 했는데, 저도 그 우면산을 등산로로 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이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우면산을 계단에서부터 이렇게 환경도 잘 조성해 놨는데 그게 하여간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자꾸 언론에서 인재라고 그러는데 제 의견을 얘기하면 나는 거기를 만날 활용하는 사람인데

그게 인재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등산로를 잘 만들어 놓아서 물길을 넓혀 줘 가지고 피해가 적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면산에 대해서 좀 아세요? 청장님도 등산 좋아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기상청장 조석준** 예,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기상 현상이라는 것은 정말 100년 만에 나타난 엄청난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저희가 조기에 그런 상황이 국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전파가 돼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청장님이 보시기에 우면산 사태가 인재예요, 천재예요?

○**기상청장 조석준** 단도직입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부분적으로 희생이 된 부분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법관 위원** 그게 천재예요, 천재. 왜 그러냐 하면 우면산이 홍산이에요, 완전히 홍산. 400mm가 부니까 흙이 전부 다 물로 되어 가지고 완전히 범벅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냥 쓸려 내려진 겁니다, 그게.

○**기상청장 조석준** 예, 천재지변 성격이 강합니다.

○**이법관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한 두 군데입니까? 그런 것 좀 기상청에서 인재 아니라고 발표 좀 하십시오, 괜히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지 마시고.

○**기상청장 조석준**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우면산은 천재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여주하고 이천은 언제쯤, 몇 년도쯤 아열대가 됩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나중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서.

○**기상청장 조석준** 예.

○**위원장 김성순** 이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규 위원** 손범규 위원입니다.

김용구 위원님과 정진섭 위원님과 이법관 위원님이 다 일부 지적을 하셨던 건데요.

4대강 사업의 연계선상에서 지류·지천을 정비한다 그러면 그게 국가보조사업의 형태로 진행되

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손범규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맞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가 국가보조사업이고, 국가보조사업이라면 사업별로 국가의 보조율이 얼마나라는 게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법과 시행령을 보면 원칙은 어디까지나 지자체가 국가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 조항만 그렇고 말이 보조금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4대강 지류·지천과 같이 국가가 필요해서 통치권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국가가 선도를 해 나가면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꼭 뿌려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 안 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조금 신청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가 신청해라 해서 신청받아요.

그런데 4대강의 경우에 야당에서 극력 반대를 하면서 지류·지천을 정비를 해야지 왜 4대강을 정비를 하나, 웃기는 정책이다 하면서 막 반대를 하다가 이제 4대강이 다 끝나고 나서 국가가 지류·지천 사업으로 들어가겠다 하니까 지류·지천 사업 하지 마라, 또 반대를 해요. 웃기는 반대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자체장이 반대하는 테크닉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신청하라’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보조금 신청하지 마’ 이렇게 해서 신청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은 지자체 공무원이 했다 이겁니다. 하니까 보조금이 내려온다 어쩐다 하니까 내려오고 나서 매칭펀드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안 한다든지 또는 지방의회를 장악해 가지고 매칭펀드에 대한 심의 의결을 부결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방해 공작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럴 때 국가의 탈출구가 있나를 봤더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에 그럴 때는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보조금 전액을 교부해 줄 수 있다, 또는 재해 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우는 보조금 신청된 것보다 더 줄 수 있다, 기타 기재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불가피하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 규정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정도 규정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평상 야,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금 준단다, 우리 매칭펀드하자, 주민도 좋고 지자체장도 좋고 지방의회도 뒷받침해 가지고 매칭펀드의결하는 그 지자체는 자기 돈을 쓰는데, 막 버틴다 이거예요. 지자체장이 막 버티.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필요해, 해야 돼, 그러니까 전액 다 쥐 버려요.

그러면 협조하는 데가 이상한 데가 되지. 그러면 거기서도 피가 나 가지고 버티면 전액 다 준다, 버티자, 버티자, 그러면 버티는 데가 하나 들 늘어날 때마다 전액 다 때우고 전액 다 때우고 할 거냐…… 무슨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에요, 국가 예산이?

그런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령도 좋고…… 이것 환경부하고 국해부하고 다 의논해야 돼요. 대통령령도 좋고 무슨 행정지침도 좋고 훈령도 좋으니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지자체장과 지자체의 의회와 그 지자체의 관할 국회의원 이런 대표자들에게 사전에…… 지자체에다가 덮어놓고 ‘보조금 신청해라’ 하고 이렇게 공문 날리지 말고 사전에 지자체장하고 지자체 의회하고 국회의원한테 서면을 보내 버려요.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대통령령 몇 조에 의해서 몇 %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땡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나는 부정적이다, 네거티브…… 지자체에 의결시키는 겁니다, 의결하라, 부의하도록. 언제까지 가부 결정 안 해 주면 이것은 부결로 보겠다, 부결된다든지 상정 안 한다 그러면 부결……

그런데 국회의원한테 물어봤더니 ‘꼭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일 부라도 네거티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삼자가 일치해서 네거티브된 경우가 있고 삼자가 일치해서 포지티브인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다 포지티브이면 예정된 보조금을 쥐 버리고 한 사람이라도 네거티브다, 한쪽이라도 네거티브다 할 때는 국가가 0에서 100까지 재량권을 가지도록……

그리고 원래 보조금의 50%밖에 안 준다, 아니

면 다 네거티브니까 안 준다, 이렇게 안 줄 때는 그것을 주민한테 공시해 줘야 됩니다, ‘당신들이 사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 당신네 국회의원 이 다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국가는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매칭이 안 되니까, 반납될 예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뺐다.’ 그리고 삼자가 다 포지티브한 데는 팍팍 줘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가 사전 예고를 하고 재량권을 가지고 영을 세우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돈 쓰고 국가는 속된 말로 망가됩니다. 또는 질질 끌려다니면서 자꾸 돈 쓰다가 불일 다 보고 장관이 지자체장의 노예가 되는 이런 웃기는 나라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딱 준비를 해 가지고 서류·지천으로 들어갈 때 제대로 영양가 있게 들어가고 제대로 국가답게 들어가야지 지금 관행대로 그냥 연초 되면 죽 공문 다 날려서 ‘신청하라’ 그랬다가 계산 다 해 보고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빵구 나고 저기서 빵구 나고 계산 다 엉망진창 되고 정신없고 그래 가지고 지지부진, 지지부진……

지금 봐요. 여기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보십시오. 생태하천사업 같은 것 지자체의 협조로 인해 생태…… 지금 안 된 게 천지입니다. 이것 계속 내버려 둘 거예요? 정진섭 위원님도 그랬잖아요. 정진섭 위원님은 지방자치의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국가가 자꾸 보조금 줘서 하려고 그러는 것을 문제로 삼으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주민들이 막 원한다 이거야.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해. 대다수가 그런데 지자체장이나 또는 야당이 지자체의 다수를 장악한 의회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서 신청 못 하게 하고 매칭펀드 안 부치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바람에 다 망가되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자체장이, 지방의회가 트는 것으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잘못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연구해 가지고 딱 만들어서 사전에 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바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손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희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발언하십시오.

○**홍희덕 위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결산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지방상수도 통합사업을 연계시키지 말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당시에 대답하기를 상수관망 시스템 구축사업과 지방상수도 통합사업을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보조금을 지자체가 받으려면 지방상수도 통합실시협약을 맺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노골적으로 상수관망 시스템 구축사업과 지방상수도 통합사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아예 공식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 내용은 제가 잘……

○**홍희덕 위원** 그러면 담당을 누가 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상하수도정책관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홍희덕 위원** 2010년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률이 62.7%에 불과한 저조한 이유, 대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일단 여러 자치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지방의회 동의 구하는 행정절차가 길고요. 또 하나는 차등보조를 때문에 통합 시·군 간의 보조율이 서로 다릅니다. 그로 인한 서로 자치단체 간의 불협화음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래서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 협약을 맺어야 지원을 하는데 지자체가 통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의견을 제가 표명하는데요.

통합실시협약이라는 조건을 없애고 지원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좀 되지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그것은 저희 환경부도 그렇게 희망을 하는데요. 보조율에 관해서는 지금 기재부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 한번 다시 협의해야 될 것으로……

○**홍희덕 위원** 예, 한번 협의를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탄소포인트 재원 확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26억 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은 21억 원이었는데 여기저기 사업에서 비용을 절감해서 5억 400만 원을 전용 증액시켰습니다.

장관님, 전용 증액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아무래도 탄소포인트 제도가 가입자가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미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정했던 것보다 더 금액이 늘어나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환경부 예산 자료를 보니까 탄소포인트 목표 대비 2010년 238% 초과 달성을 했고요. 원래 2010년 탄소포인트 가입 목표가 70만 세대였는데 실제 가입 세대가 많이 늘어났어요. 167만 세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환경부 예측보다 많은 세대가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업비를 절감해서 그 돈을 끌어 모아서 전용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가입자 수는 올해 보니까 훨씬 늘어났어요, 또. 2011년 6월 현재 탄소포인트 가입자 세대는 197만 1900세대입니다. 참여율이 12.2%에 이릅니다.

근본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입하는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재원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률이 10% 이하인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을 좀 축소를 하거나 또 하나 적극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저희가 그린카드 제도를 실시를 하는데 그린카드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린카드를 통해서 얻는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걱정되는 것은 지금 탄소포인트 제도와 그린카드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재원 대책이 어려워서 탄소포인트 제도는 없애고 그린카드만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이네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소포인트는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지요. 그렇지만 그린카드는 비록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를 촉진해야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제도입니다. 그린카드는 오히려 보조적인 수단이고 탄소포인트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상이 바뀌면 주객이 뒤바뀌는 거예요.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말씀하신 그린카드 제도는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칙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적극 장려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 제도도 아마 병행해서 같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도 줄이고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을 사용하게 되면 깎아주거나 포인트를 더 지급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탄소포인트도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다음 예결소위 때 근본적 재원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및 기상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과 현안 질의 그리고 환경부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대체토론을 실시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및 기상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

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몇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과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서는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두 분이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 및 현안질의,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존경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2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귀중한 지적을 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초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자리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매우 힘든 상황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고용 사정도 회복세로 돌아서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급속한 경제 상황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제회복의 성과가 일자리로 이어져 국

민들께서 골고루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해 고용노동정책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취업애로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고용 여건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체계를 정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노조 전임자 제도를 원만히 정착시켜 노사문화를 선진화하고,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와 산업재해 감소 등 근로환경 개선에 역량을 결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8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67%인 25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네 가지의 특별회계를 합쳐서 당초 1조 2208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13억 원과 예비비 117억 원 등 530억 원이 증액되어 총 1조 2738억 원입니다. 이 중 95.3%인 1조 2137억 원을 지출하였고 69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2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5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고용보험기금 9조 290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8조 6737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3984억 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4061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3521억 원 등 총 18조 8593억 원을 조달·운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7억 원을 배정받아 취업장려수당으로 91억 원을 지출하고 2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과 기금의 집행을 통해서 우선 청년, 여성, 고령자, 근로빈곤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등 특성에 맞는 1 대 1 취업 지원서비스를 집중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일꾼을 키우며 청년과 일자리 간의 엇박자를 줄이기 위해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등 빈 일자리와 구직자의 일손을 직접 이어주고, 내일배움카드를 전면 확대하여 직업훈련을 현장과 수요자 위주로 바꾸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풀뿌리형으로 정착되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 민간기업, 중앙부처의 협업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정책의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작년 7월 5일 고용노동부가 출범하여 고용정책을 총괄하게 되었고,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2020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여 일자리 정책의 기둥을 세웠고,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 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주춧돌도 놓았습니다.

한편 취약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임금 체불예방 등 3대 고용질서 확립에 노력하였고,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퇴직급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업종별로 특화된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산업 재해율이 0.6%대로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기본 틀인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작년 7월 1일 시행되어 현장에 정착되고 있으며 노사 협력 파트너십, 일터 혁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성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일자리를 둘러싸고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치는 현실은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분들,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고 있지만 상생과 협력으로 일자리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흡합니다.

금년 고용노동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정책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새로 일하고 주부가 다시 일하며 고령자가 계속 일하고 장애인이 함께 일하도록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근로권익의 보장은 강화하면서 근로시간은 유연화하고 불합리한 고용규제는 합리화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더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복수노조제도를 안착시키고, 공정하고 책임을 지는 노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사가 힘을 합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 높은 일터로 전환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조재정 노동정책실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재홍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한창훈 인력수급정책관입니다.

하미용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입니다.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입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입니다.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권혁태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신기창 정책기획관입니다.

심경우 국제협력관입니다.

정지원 대변인입니다.

최수홍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중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인사)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백현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입니다.

정철균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입니다.

류시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허병기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사장입니다.

허병기 이사장은 임기가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다마는 결산을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전운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노동정책실장으로 하여금 결산 내용에 대해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허병기 이사장님 오늘 퇴임식 한다면서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허병기** 예.

○**위원장 김성순** 그러면 지금 가지지요. 위원님들 악수 한번씩 하고 빨리 돌고 가십시오. 퇴임식은 해야지요.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정책실장, 보고하십시오.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조재정** 2010회계연도 고동노동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회계연도 재원 규모, 회계별 결산, 기금결산,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황 순입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은 본부의 3실 13관 35과 5팀, 소속기관은 47개 지방노동관서, 고용센터 80개소, 15개 위원회와 1개 고객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산하 공공기관은 6개 출연기관과 2개의 재출연기관, 2개의 기타 기관이 있으며, 관련 기관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3쪽, 조직도와 4~5쪽에 있는 주요 기능은 자료로 대체하고,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원 규모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의 재원 규모는 20조 13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76억 원 감소한 수준입니다. 지출 규모는 17조 4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2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은 1조 21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은 15조 8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458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재원별 분포를 보면 고용보험기금 44.8%, 산재보험기금 43.1%, 일반회계 5.9%, 장애인기금 2% 등입니다.

회계별 구성은 총 1조 2738억 원 중 일반회계 1조 1948억 원, 특별회계 790억 원이며, 기금별 구성은 총 18조 8593억 원 중 고용보험 9조 290억 원, 산재보험 8조 6738억 원, 임금채권 3984억 원 등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징수결정액은 3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원이 증가하고, 수납액은 2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67%로서 전년 대비 6.8%p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억 6000만 원으로 7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조 2208억 원이었으나, 53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2738억 원으로, 이 중 95.3%인 1조 2137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3%로 전년 대비 4.5%p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4억 원이 감소하였고, 불용액도 전년 대비 355억 원이 감소한 532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원이 증가하고, 수납액은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254억 원이나, 수납률은 68.3%로서 전년 대비 7.1%p 감소하였습니다. 수납률 감소는 납기미도래,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4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과태료 미수납이 23억 원,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36억 원, 기타경상이전수입 54억 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조 1422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10억 원과 예비비 117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1948억 원으로 이 중 97.2%인 1조 161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용정책사업 4372억 원, 직업능력개발사업 3246억 원, 고용평등사업 353억 원, 노사협력 237억 원, 근로기준사업 149억 원,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 155억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취업장려수당 26억 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7억 원,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5억 원,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5억 원 등입니다.

불용액은 280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 114억 원, 사회적기업육성 45억 원, 노동위원회 인건비 14억 원,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11억 원 등입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는 전용과 이·불용 내역입

니다. 자료로 같음하고, 19쪽 예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취업장려수당에 117억 원을 배정받아 91억 원을 지출하고 26억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구직자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알선을 통해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장려수당으로 취업 후 1개월 경과 시 30만 원, 6개월 경과 시 50만 원, 12개월 경과 시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편성 근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를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8억 700만 원 중 8.4%인 6800만 원을 수납하고, 40.5%인 3억 2700만 원은 미수납하였으며, 51.1%인 4억 1200만 원은 불납결손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 내역은 폐광 등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미납 1억 3800만 원, 사업주 부담금 연체료 1억 8600만 원 등이며, 불납결손액은 주로 체납자 무재산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1쪽입니다.

예산현액 692억 원 중 63.6%인 440억 원을 지출하고 252억 원을 불용하였으며, 주요 지출 내역은 진폐위로금 402억 6600만 원, 건강진단 30억 3400만 원 등입니다.

22쪽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이농예상 농어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어민지역 실업자직업훈련비로 8억 93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경상이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제주고용센터, 제주 지방노동위원회의 주요사업비 및 기관운영비로 66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억 원 중 8억 원을 지출하고, 14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

월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의 수입결산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징수결정액은 17조 8167억 원이고, 수납액은 15조 8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458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조 7654억 원으로 고용보험기금 2914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5829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8479억 원 등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223억 원으로 고용보험기금 668억 원,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 1083억 원, 임채보장기금 435억 원 등입니다.

25쪽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 지출액은 15조 8290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계획현액 대비 95.1%인 10조 9816억 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은 4조 8474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조 9746억 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4조 4446억 원, 재산수입 3215억 원, 경상이전수입 2222억 원, 여유자금 회수 등 2조 9863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7조 6164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사회보장기여금 4조 2184억 원, 재산수입 3215억 원, 경상이전수입 902억 원, 여유자금 회수 등 2조 9863억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사회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등 668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보험료·가산금·연체금 등 2914억 원입니다.

29쪽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9조 290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지출계획 현액 대비 96.9%인 6조 11억 원을 지출하고, 38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89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1조 6153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실업급여사업 4조 985억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조 7977억 원, 고용보험사업운영비 1048억 원 등 총 6조 1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비 이월액은 종합직업체험관 신축 37억 원, 사업운영비 이월액은 연구개발비 1억 원이며, 사업비 불용액은 실업급여사업 394억 원, 고용안

정·직업능력개발사업 1482억 원, 고용보험 사업 운영비 13억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조 8548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사회보장기여금 4조 9695억 원, 재산수입 1356억 원, 경상이전수입 4710억 원, 여유자금 회수 등 2조 2787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7조 1636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4조 6353억 원, 재산수입 1356억 원, 경상이전수입 1162억 원, 여유자금 회수 등 2조 2765억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사회보장기여금 및 경상이전수입 등 1083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사회보장기여금 및 경상이전수입 등 5829억 원입니다.

33쪽입니다.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8조 6737억 원이며 사업비는 지출계획 현액 대비 93.6%인 4조 3332억 원을 지출하고 2939억 원은 불용하였으며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2조 8304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산재보험급여 3조 5237억 원, 반환금 967억 원, 산재보험사업 1542억 원, 산재예방사업 1921억 원 등 총 4조 333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939억 원으로 산재보험급여 2694억 원, 산재보험사업 76억 원, 산재예방사업 52억 원 등입니다.

34쪽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064억 원이고 이 중 31.8%인 41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사업주부담금 2087억 원, 사업주변제금 1082억 원, 여유자금 회수 905억 원, 가산금 및 이자수입 등 76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사업주변제금, 사업주부담금, 가산금 등 435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사업주변제금, 사업주부담금, 가산금 등 8479억 원입니다.

35쪽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984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지출계획 현액 대비 94.9%인 2892억 원을 지출하고 154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1258억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액은 해당금지급액 2639억 원, 반환금지급액 81억 원, 무료법률구조지원 89억 원 등이며, 불용액은 154억 원으로 해당금지급 143억 원, 기금 및 사업운영비 등 11억 원입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69억 원으로 부담금 1499억 원, 용자금 회수 252억 원, 연체금 등 기타 146억 원, 정부내부수입 280억 원, 여유자금 회수 891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3004억 원으로 부담금 1461억 원, 용자금 회수 252억 원, 연체금 등 기타 120억 원 등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체납자 무재산 등 12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부담금·가산금·연체금 등 52억 원입니다.

37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4061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지출계획 현액 대비 98.7%인 2471억 원을 지출하고 33억 원은 불용되었으며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534억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액은 장애인고용장려금 1521억 원, 표준사업장 지원 101억 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119억 원 등이며 사업비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41억 원이며 수납액은 3336억 원으로 자체수입 1344억 원, 복권기금전입금 133억 원, 여유자금 회수 1859억 원 등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자체수입 25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자체수입 380억 원입니다.

41쪽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521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지출계획 현액 대비 66.1%인 1111억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68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2225억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액은 기금관리비 및 사업운영비 74억 원, 근로자 복지 지원 49억 원, 근로자 생활안정 등 생계비 대부 523억 원, 신용보증 대위변제 101억 원 등입니다. 이월액 1억 원은 퇴직연금가입자 교육시스템구축사업의 계약 기간 미도래 및 운영비 미지급분입니다.

사업비 불용액은 신용보증 대위변제사업 258억 원,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168억 원, 신용보증 계정 전출금 87억 원 등입니다.

42쪽입니다.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국유재산은 전년 대비 141억 원이 증가한 5540억 원이며 주요 내역은 토지 3244억 원, 건물 1854억 원, 무체재산 391억 원, 공작물 50억 원 등입니다.

43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국가채권은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62억 원이며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미회수액 55억 원, 청사임차보증금 등 기타 수입 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노동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전문위원입니다.

자리에 깔려 있는 결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해서 2010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254억 2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전년도보다 7.1%p 감소된 68.3%로 나타났으며 미수납률은 2009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납률 제고를 위한 미수납금 회수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용정책사업 중 글로벌취업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 부진으로 인하여 재이월되어 2010년도도 집행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그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좀 더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의 경우 저소득 취업에 로계층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이 부진하여 이를 민간 위탁사업비로 조정·사용함에 따라 위탁사업비를 초과 지출하였는바 향후 개선이 필요합니다.

2쪽입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사업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취업희망자 과정은 다른 부처가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가 계좌제 형태로 훈련비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사업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사정책사업 중 작업장혁신지원사업의 하나인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경우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의 일부를 미실시하거나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바 사업장 선정 시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사업 수행 능력을 고려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평등사업 중 모성보호지원사업의 예산 3360억 원 중 100억 원만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재정과 고용보험기금이 적정한 비율로 모성보호급여를 분담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당초 기금의 계획규모는 18조 8557억 원이었으나 실적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기금 7조 6163억 원 등 총 15조 8290억 원으로 집행률은 83.9%이고 전년 대비 13.4% 감소하였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사업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의 당초 예산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축소되었음에도 불용률이 38.6%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신규직원 채용에 있어 청년인턴제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비해 지원 조건 등이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 중 훈련수료자고용지원센터 예산 35억 원을 전액 불용하였고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의 신규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취업실적 저조 등 사업효과가 미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전직실업자 취업훈련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좌제를 통한 실업자 직업훈련이 훈련 실적에 치중하기보다는 고용시장의 인력 수요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취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평등실현사업 중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사업

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소득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입니다.

보험급여사업 중 직업재활급여와 진폐제도 개선 관련 보험급여의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금계획 수립 시 급여의 부정확한 추계와 직업재활급여의 도입 초기 과다 계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중 체당금지급사업의 경우 2014년 이후에는 적립금 규모가 2009년 체당금지급액의 2배 규모로 상향할 것으로 보이므로 부담금 비율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저소득 장애인근로자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의 경우 선진기업 복지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장이 주로 퇴직연금 도입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다른 기업복지제도의 도입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며 일반회계 지원, 신용보증적자 부분에 대한 해당 기금의 출연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장려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201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비가 116억 6800만 원으로 취업장려수당 지원사업에 전액 배정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2009년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음에도 2010년에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하여 사업을 확대·추진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시정 및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결산 관련 질의와 현안질의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민주당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가 부당하고 회사가 정리해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없음에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토대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노사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에 다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사태가 이렇게 오기까지 정말 노동부에서 너무 역할이 없었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225일째 김진숙 지도위원이 35m 크레인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공생발전’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한진중공업 문제는 반드시 제대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한진중공업처럼 경영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기침체나 이런 것을 핑계 해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도 아니고 부도를 당한 것도 아니고, 한진중공업의 재무제표라든지 그간 10년 동안의 경영실적 이런 것을 다 보면 결코 정리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허용을 하게 되면 정리해고가 남용이 되고 이 제도를 도입한 자체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노사 간에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진중공업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정도는 회사가 조기에 정상화가 되어서 고용안정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도를 통해서 풀어나가게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풀 수 있게끔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당사자들이 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레인 농성이라는 사태 부분들도 잠시 접어 두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면도 같이 건의,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어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 말씀은 나라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요, 회사 차원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회사가 정상화가 되고 난 이후에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지요? 3년 후에 정상화가 되고 나서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영상 해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영표 위원** 장관께서 그런 식의 발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제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에서, 경영 상태가 나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고를 하기 시작하면 정리해고가 남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도 못 만드는 정부에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도 못 지켜 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정상……

○**홍영표 위원** 오늘 주질문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논쟁을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꼭 좀 하고 싶었던 것이 얼마 전에 장관께서 8월 1일 날 공공기관 임금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09년도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초임 수준을 강제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장관께서도 이 제도가 얼마만큼 엉터리로 잘못 됐는가,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8월 2일 날 “하후상박의 원칙에 의해서 신입사원, 신입직원의 임금은 높게 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은 낮게,

특히 입사 2년차부터 3년, 5년에 걸쳐서 기존 직원과의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졸 초임 삭감정책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법적으로 보더라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위배합니다. 장관님, 인정하십니까?

제가 한 사례를 드리면요, 한 공기업에서 같은 대학의 같은 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입사를 군대 갔다 와서 한 2년 늦게 했는데 월급 차이가 1000만 원 납니다. 이거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제적으로 임금을 신입직원들에 대해서 낮추다 보니까 지금 임금 자체가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1~2년 동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 임금을 받은 사람은 이 회사를 정년퇴직할 때까지 불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도 위배되고 있고 차별금지를, 못 하도록 우리 헌법에도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권위원회법이나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 차별금지도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노동3권에 의해서 단체교섭을 해서 단체협약을 맺고,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장관께서.

물론 우리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강제조항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기관장들의 평가.

또 하나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그러면 공기업들, 공기업의 임금을 민간 수준과 맞추겠다.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공기업에서도 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어떤 문제 해결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공기업이 공기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권 아니면 다른 일반 공기업이 또 다릅니다. 그러면 기업은행 다니는 사람하고 국민은행 다니는 사람의 임금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리고 지금 같은, 비슷한 조건의 어떤 수준, 학력과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일반기업과 공기업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지금 그 당시에 워낙 정부가 강력하게 이 정책

을 강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민간기업들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다 원상복귀 됐습니다. 그런데 공기기업만 지금 그 제도를 고수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3~4년차 직원들 임금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맞춰 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가지 드린 근거로 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든지, 평등권을 침해한다든지,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든지, 그다음 노동3권을 부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불법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께서 앞장서서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기기업의 어떤 임금 수준이 너무 우리 사회의 민간 수준보다도 더 높고 또 그래서 이게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임금 인플레이가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잘못된 제도를 도입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저는 우리 장관님의 이 보도문을 보면 그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달 말쯤에 공공정책위원회입니까? 거기서 이걸 다시 정한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좀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실은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문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비록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고용노동부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케어(care)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들은 내부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비록 출발할 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상의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민간과 공공 간의 지

나친 임금 격차로 해서 국민들은 ‘신의 직장’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대졸 초임부터 이렇게 줄여 나가면서 민간과 공공 격차를 줄이고자 했습니다마는 1년 반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먼저 들어온 직원과 나중에 들어온 직원 간의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 부분은 고쳐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은 당장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겠다 싶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안에는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해법을 제가 오히려 앞장서서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하후상박의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을 조금만 조정하면 신입 직원들의 임금 문제는 2~3년 안에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물고를 텃다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해 주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위원** 이것은요 결코 의미 있게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지금 임금 총액, 그 부서별 임금총액에 의해서 묶어 놓고 3~4년차 또 임금 낮춰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공기기업의 사장님부터, 임원부터 임금 좀 줄이세요. 장관님부터 줄이시고. 왜 힘없는 신입사원들,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가서 국가에 대해서 애국하고 충성하고 왔는데 임금이 똑같은 옆자리 앉은 사람, 같은 일하는 사람보다 500만 원, 1000만 원이 적어야 됩니까?

이것은요 몇 년 있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까.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위원장 김성순** 자,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또……

○**홍영표 위원** 이 제도 자체가 아주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당장……

○**홍영표 위원** 전시성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전혀 개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마무리하시죠. 됐습니다. 마무리하시고요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합시다.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에, 이쪽 자리에

계시던 분이 저쪽 자리에 이제 많이 계신데 이거 축하드려야 되는 건지, 이쪽 계신 분은 당연히 축하인데 이쪽은 정년 때문에 축하가 아니고 좀 그렇네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신규고용촉진기금의 사업대상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요?

○강성천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령자·장애인·여성, 이런 취약 계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게 되지요?

장기구직자·임신·육아·출산 여성 이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신규고용촉진사업의 집행률이 2009년에 56.7%였고요, 2010년에는 61.5%로 아주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것은 고용부의 지도 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집행률 부진 문제는 그 제도가 이제 2010년도에 많이 갱신이 되면서 실제로 지원된 인원들이 하반기에 주로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금액의 집행이 좀 낮았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2008년 이후 지원자 중에 고령자·여성 가장·출산 여성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2008년 5300여 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3700명, 지난해에는 2500명으로 2년 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출산 여성에 대한 지원금은 집행률이 20%로 거의 유명무실한데 장관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것이 육아휴직급여가 저희들이 당초 5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통상 임금의 40%로 하되 100만 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지원하도록 하고요, 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 선도기업을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난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

정수급은 얼마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자료에 의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6억 7000여 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부정수급이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374건이나 증가했거든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지도 감독이 부실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게 항상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뭐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액은 줄었습니다마는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정수급조사를 엄정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늘었고요. 동시에 부정수급 관련된 자동경보시스템도 많이 보완을 하고 부정수급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의 따가운 지적도 있었습니다. 해서 신고포상금 수준도 향상을 시키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니깐 건수는 결과적으로 보면, 실체를 바탕 해서 나온 거였습니다마는 좀 늘어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난해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이 강화되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그렇지만 취업장려수당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이 제도의 설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취약 계층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취업장려수당은 열악한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양쪽 측면을 다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취업장려수당은 한시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폐지를 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습니까?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사업대상은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취업성공패키지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 취업애로 계층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북한이탈주

민·출소예정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취업취약 계층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진으로 46억 5000만 원이 전용됐고 9억 14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희들이 업무를 좀 제대로 못 한 측면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기초통계 자료가 좀 빈약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한 참여 인원하고 실제로 참여한 인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고 또 훈련 자체도 계획은 상반기에 주로 훈련기관에서 개설합니다마는 참여하는 분들은 주로 하반기에 참여하게 되고 해서 실제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이거 한번 들어 보세요.

이 사업은 대상 인원 2만 5561명 중에 취업자 수가 9131명으로 취업률이 67.2%로 상당히 좋은률이지만 참여 인원 대비 취업률을 봤을 때 35.7%에 불과한데 이거 왜 이러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 부분은 이제 시점에 따라서 조금 통계상 차이가 있는데요, 금년 7월 현재로 보면, 왜냐하면 1년 쯤 뒤에까지 봐야 되는데요.

취업률로 하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들 중도탈락 문제도 있고 해서 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 중도 포기자가 이제 3553명으로 많고요. 기간만료 미취업자도 1004명이나 돼서 집중 관리가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 이걸 집중 관리하시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꼼꼼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2010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집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자료에 의하면 훈련 참여수당 집행률은 38%가량 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취지와 다르게 단순 취업알선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계획대비 한 80% 정도는 훈련에 참여할 걸로 봤습니다마는 실제로는 70% 가까이만 참여를 했고 또 시기가 하반기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

원도 좀 그렇고 예산 집행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취업성공패키지 이 사업의 취업자 수 9131명이 대부분 어떤 직종에 취업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저희들이 뽑은 자료를 보면요.

사무관련직 22%하고 관리직 12% 해서 한 34% 가까이는 사무직과 관리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보건의료직이 13% 그다음에 생산직이 16%, 경비·청소가 12%,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얘기 중에서 제일 많이 된 게 청소·경비 등 단순직이 23.8%입니다.

장관님, 사무관련직이나 청소·경비 업종은 복잡한 사업과정이나 관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취업이 가능한 직종 아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연령을 보면요.

50대 이상이 한 20% 가까이 되고 30대, 40대가 참여율이 한 60% 가까이 되고 또 20대, 10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사무뿐만 아니라 청소·경비 이런 부분들, 좀 이 부분이 단순하다고 해서 꼭 제외하기는 곤란한 그런 사정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사업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사업비를 계획보다 20억 원을 증액 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부의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수요예측이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容九 委員 예,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金容九 委員 연일 바쁘시네요. 어제도 바쁘시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께서도 바

쁘시고 저희도 따라가기가 벅합니다.

○**金容九 委員** 예.

기금출연사업의 집행잔액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보험기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출연금 2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출연금 집행 후 남은 잔액과 이자 12억 7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고 하는데,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金容九 委員** 예.

또 근로복지공단도 산업보험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집행 후 4000만 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금에 반환하지 않고 이것 역시 자체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출연금 집행잔액 2억 5900만 원과 이자수입 6700만 원을 고용보험기금에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출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따로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수입으로 다시 정산해 기금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산하 공단에서 처리가 각각 다른데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게 좀 일반적인 기준들하고 기금마다 처리기준들이 조금씩 달리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고용보험기금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들의 경우에는 반납하는 규정이 아니고 사용하고 나서 그다음, 차차연도에 금액을 예산·기금 편성 때 덜 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는 같아집니다마는 근거법령들이 조금 달리 되어 있습니다. 해서 조금 혼란스럽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아니,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인력공단이나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거든요. 다른 부처도 아니고 같은 산하에서, 노동부 산하에서 이게 다르다는 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통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산재보상보험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의 관

련 규정을, 뭔가 여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재정당국하고 검토를 해 봤더니 이 자체가 이렇게 반납을 하든 사용하고 나서 다음번 예산·기금 편성에 삭감을 하는 방법이든 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예,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볼 적에는 뭔가 이게 좀 안 맞거든요, 다른 부처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金容九 委員** 다음은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은 보험료 납부자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므로 일반회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예.

그러나 고용노동부 사업이 대부분 기금에만 의존하다 보니 국가정책사업이 기금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금의 수익자부담원칙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장관님 미리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金容九 委員** 즉 2006년부터 2011년 동안 총 2700억 원이 소요되는 종합직업체험관 신축, 2004년부터 2008년 동안 총 5500억 원이 소요되는 고용센터 청사 매입 등 국가기관 건립사업이 이에 해당되는데 일반회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金容九 委員** 예.

그래서 이걸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 번 아마 지적한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정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하는 것

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일반회계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종합직업체험관 사업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우리 근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 형성, 이런 걸 통해서 근로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관련 법령에서도 이런 부분들, 직업정보·직업소개·직업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기금에도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한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도 좀 쓰고 기금도 쓰고, 이런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리고 기금이라는 건 출연한 사람의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기금인데…… 일반회계로 써야 할 이러한 일들을 기금을 쉽게 쓴다고 법률위반은 아니다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성보호급여사업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수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죽 거쳐서 이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金容九 委員** 예.

그런데 이게 국고부담은 한 100억 원에 머무르고 말이지요, 보면 기금에서 3607억 원이나 이게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을 보면 사업 시행 첫 해인 2002년을 비교해 보면 국고부담은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에 고용보험기금은 33.8배가 부담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 기금의 목적 이외로 쓰는 건 고사하고 자꾸 이게 불어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기 편리하다고 해 가지고 이러면 이것 문제가 아니겠느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金容九 委員** 뭐 어느 정도 좀 보충을 해서 쓴다, 그런 건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아니, 국고는 자꾸 줄어들고 기금에서는 33.8배나 말이지요, 이렇게 자꾸 늘려 간다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모성보호 부분도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 그리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그에 비해서 일반회계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게 정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일반회계 지원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고요, ‘잡월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당사자에게 혜택이 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 차원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아니, 이것 이해가 아니고 원론적으로 틀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정을 해야지 자꾸 장관님께서 그냥 그시그시 변명만 해 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뭔가 이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 법률적으로 위반해서 된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그걸 좀 원칙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야지요.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김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진섭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 예, 이정선입니다.

장관님, 2010년의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정선 위원** 2011년에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통합이 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정선 위원** 그런데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관해 고용부에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산업분야별 취업현황 자료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업별 한국고용직업분류표라든가 취업 산출, 고용유지 기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것을 아직 파악을 안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선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 나영돈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2009년 최초 시범사업으로 하고 2010년에는……

○**이정선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 내용을 여쭙 보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취업자 현황자료, 산업별 취업자 현황자료라든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이런 것에 관한 전반적인, 3단계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깐 “자료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자료 파악이 안 되면서 어떻게 예산지원을 하고 취업지원을 합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나영돈**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사업 초기다 보니까 그런 게 통계적으로, 시스템으로 잘 안 되어 있어서……

○**이정선 위원** 2010년도 겁니다.

지금 2010년도 결산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나영돈** 예.

○**이정선 위원** 예, 2010년도 건데 지금 달라고 하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게 지금 저절로……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나영돈** 그러니까 산업업종 같은 것이 표준산업분류나 직종분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못 되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좀 크게……

○**이정선 위원** 이게 체계적으로 돼야, 지금 민간에도 예산을 주고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돼야 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통합이 돼서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고 취업을 잘하고 있고, 이런 파악이 돼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료를 못 준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뭘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정선 위원** 이 성과보고서를 봤어요.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목표 대비 취업률이 125%다.” 이렇게 또 성과를 보고서에 썼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성과는 어떻게 나온 건지……

장관님, 이것 좀 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마도 평가의 기준이 되는 목표치 설정을 조금 전년 대비 비슷한 추세로 가다 보니까 조금 우습게 아주 초과 달성한 것처럼 비친 것 같습니다.

○**이정선 위원** 예, 이렇게 부풀리기식 하시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정확하게 좀 분석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예.

지금 굉장히 청년, 물론 이제 노동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청년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취업률도 지금 4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2010년도의 결산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다음 사업을 유지한다는 건 어렵고요.

그다음에 환수율 같은 것도 지난번에 약정환수가 좀 됐어야 되는데, 이번 11년 글로벌취업 지원사업에는 환수를 할 수 있게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뉴스타트에는 환수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9억 정도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정선 위원** 다음은 한국직업방송에 지금 우리가 한 50억씩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직업방송의 취업 방송하는 것을 혹시 장관님,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

○**이정선 위원** 보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다는 못 보고요. 몇 개씩은 보고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예.

제가 자꾸 웃지 말아야 되는데……

직업 고용 능력개발 정보를 보면 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습니다. 매년 50억씩 한국경제TV에 3년간 150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시청률이 아직 대단히 낮습니다.

○이정선 위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에 나온 조사, 케이블에서 나온 조사인데요. 0.001%입니다.

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방송 KTV 같은 경우는 0.08이고요. 국회방송도 0.08, 장애인복지TV도 0.03입니다. 그런데 0.001%라는 건 거의 시청률이 없다는 거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직업방송에 매년 50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직업 고용 능력개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로 장애인 다큐 그다음에…… 좋습니다. 장애인 다큐를 해서 뭐 사회적기업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뭐 공존해서 나가는 세상’, ‘희망스토리 사회적 기업’, 뭐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과연 장애인을 위한 취업 방송인지, 물론 다른 일반 방송도 간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장애인 방송을 하면서 수화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2010년 제작된 프로그램이 총 2160편인데요. 시사나 평가회가 프로그램에는 거의 없습니다. 0.6%에 불과합니다.

모니터링 산업인력공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모니터링 결과, 혹시 산업인력공단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이정선 위원 예, 모니터링 결과 갖고 계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입니다.

○이정선 위원 예.

모니터링 갖고 계십니까, 이 방송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모니터링 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예, 저희 방에 별도로 주십시오, 모니터링 하신 것에 대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 예.

○이정선 위원 그래서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정선 위원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되 이렇게 시청률이 낮은, 이렇게 성의 없는 방송을 매년 50억씩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예산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고민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한번 저도 고민을 하고 장관님도 고민을 하셔서 효과성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구 위원님께서 “일반회계로 써야 될 사업을 기금으로 쓴다.” 이런 지적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3년 전에 제가 야당 할 때 참 열심히 싸우던 항목이었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변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 사정이 어렵다.” 그 말씀 하시는 것도 그때하고 답이 똑같고 “법률 위반은 아니다.” 그 답도 역시 똑같습니다. 일반회계가 지금 한 뭐 5.몇%, 다른 뭐 특별회계 합치고 뭐 해서 한, 국가가 돈을 대고 뭐 하는 게 한 6%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기금으로 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한 6% 정도 대면서 사실상 노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라인에는 우리 공무원 출신들이 다 들어가 계시고 노동자 대표로 여기에 우리 백현기 이사장 딱 한 분 계시네요, 옆에 앉아 계신 것 보면.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나는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반회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항상 “아, 기금 많으니까 거기서 써라.” 그런 얘기 듣고 다니세요? 그거 도와 드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말씀 한번 드릴까요? 각 기금에다가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하나씩 다 넣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반회계 확보하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다니시겠지요.

진짜 노동자를 생각하고 또 고용노동부가 되려고 하면 일반회계 확보 노력을 먼저 하세요. 그래야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지적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개를 끄덕임)

○**정진섭 위원** 하도 기금이 많아서 참……

그리고 앞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고용보험기금 갖고 건물 참 훌륭하게 잘 샀습니다. 이제 뭐 대개 끝나셨겠지요. 하드웨어적으로는 훌륭한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과연 충분한가, 전문성을 다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어요. 이제 투자를 하려면 그런 데에 좀 하세요.

정말 기금을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를 하는 거는 나는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132억인가 지금 인건비로 들어오는 기금을…… 아, 일반회계를 그냥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고 기금에서 인건비를 충당해서 고급인력을, 확실하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더 확충해 가는 것, 이런 방식으로라도…… 아, 하드웨어에 맞게 소프트웨어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만 번드르르하면 됩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지금 고용에 혼란이 왔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고용센터들이 잘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질적인 성장도 함께 좀 고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용기금은 실업보험 때문에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좀 감소도 했는데요. 보니까 산재보험은 해마다 1조씩 늘어나대요, 그렇지요? 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는 것도 아니고 161만 사업장에서 내는 겁니다, 사업주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총 임금분에서 예상되는 지출금액으로 계산해서 내는 건데 해마다 1조씩 늘어나서 이렇게 쌓을 것 같으면 요율을 깎아 줘야지요. 그게 정부가 할일이지요, 그래서 여유금 많이 갖고 있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 실업보험 같은 것은 뭐 등락이 있으니까 좀 예비자금을 갖자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뭐 산재율도 0.6%대, 그것도 0.69인가 얼마라고 합디다마는 하여튼 내려 왔다고 자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낮춰 줘야지요. 그 낮춰 줄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산재보험요율의 경우 이제 지출 규모에 맞게끔 수입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정하면서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1.7% 정도 낮췄는데요. 지금 저희들 고민사항이 산재보험에서 연금지출분에 대해 정확한 추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연금지급 부분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말하자면 법정 지출 적립금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나라는 차원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연구를 속도를 내서 완성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요율에도 반영을 하도록……

○**정진섭 위원** 장관님, 지금 1조씩 늘어나는 게 5년째인가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연구만 하고 계십니까? 그것 들어오는 거는 다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돈 내는 사업주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안일한 자세예요. 빨리 검토해서 낮춰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여튼 기금이 많이 쌓여 가지고 이거 운용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참 우리 국정감사 때 항상 단골 메뉴였는데, 지금 고용·산재 양쪽 합쳐서 전문가 한 사람이 뭐 은행에다 넣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데 예탁금 관리 관련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간접투자방식으로 하면서 전문가 중심으로 자산운용위원회를 엄격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전문가라고 한 사람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왜 다른 근로복지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연기금 투자쪽에다 갖다 넣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컨대,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처럼 장기간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근로복지기금,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아주 소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쓰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유자금을 갖고 운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그거라도 늘려서 쓸 수 있게끔 전문가…… 특히 2010년으로 따지면 뭐 주가가 거의 폭등하던 시대였는데 그런 때 뭐 하고 앉아서 무슨 은행에다가 어느 계좌에 넣었느냐, 이런 것……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갖고 항상 보면 뭐 어디에다 예치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뭐 비리도 많고 참 복잡하잖아요. 다른 데 다 보는 거잖아요. 이것을 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운용하는 고용·산재 보험 여유금 운용은 대단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적으면서도 수익률 같은 거를 보면 다른

연기금 운용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이 유가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안 갖고 있어서 여기까지 하는데 요, 예결위에서 마저 하도록 합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시고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일반회계 확보의 중요성’ 그런 질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 다만 일반회계 비중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계속 9%대에서 10%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보고를 드리면서 지난번 IMF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일반회계, 국채 같은 경우로 대폭 투자를 끌어 오기 때문에 꼭 단년도 위주로만 볼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순 예, 하십시오.

○정진섭 위원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 국토해양부 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하나 전달하려고…… 제가 거기에 있다 이리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저한테 얘기를 좀 해서 그러는데요.

건설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해서 과거에 8개 기관을 다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5개로 줄인다고 그러면서 괜히 기관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이렇게 복잡한 양상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거라면 협회들 중심으로 다 들어가 줘야 되고 돈 많이 낸 순서로 한다고 그러면 또 공제조합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이 다 마땅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간을 내놓는다고 한 것을 보면 뭐 이것저것 섞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 이래 갖고 불만들이 있어요, 국토해양부 쪽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잘 좀 협의 하셔서 좀 과거와 같이 운영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엄정한 기준을 갖고, 물론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기는 하지만 잘 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어느 기관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장관님, 근로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작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아파트를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각하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임대아파트 지침과 법률을 근거로 매각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고 현재에는 그런 방침들을 취소하고 새로 입주자들을 받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그런데 새로 입주자들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원래 근로자 임대주택 취지와 맞지 않는 일반 신규 입주자들이 대거 입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입주과정에서 저임금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혹은 미혼여성 근로자, 일반 신규 입주 근로자, 각각 입주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좀 보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홍희덕 위원 그거는 나중에 좀 그 자료를 저한테 꼭 보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고용노동부는 부담스러운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려다가 실패하자 그냥 일반 신규 입주자들을 받은 것입니다. 매각방침을 취소하기는커녕 아직도 매각방침은 유지하되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라고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입주대책을 세울 때 기존 소산자들에게는 연락을 취했습니까? 결국 잘 지내던 취약 근로자들을 내쫓고 일반 주민들을 받은 그런 꼴이 됐어요.

장관님, 임대주택 아파트는 미혼여성 등 취약 근로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입주자 선발에 있어서 그 원칙을 지켜서 제대로 좀 운영을 좀 하시고요. 매각방침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좀 취소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임대아파트가 25년 이상 노후화됐어도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운영관리비를 제외한 수리비 등의 예산을 거의 배정하지 않아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거 뭐 매각할 생각

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요. 2010년에도 아파트 전체를 수리하는 데 2000만 원을 배정해 놓고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2000만 원으로 뭘 수리했습니까? 이번 폭우에 취약 근로자들이,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홍희덕 위원** 고용노동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데다가 뭐 많은 돈 2000억, 3000억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업이다, 외면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장관께서 한번 직접 찾아가 보시고 근로자 임대아파트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아까 그 수치하고 보고해 주시고 향후 운영계획과 보수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그 임대아파트를 매각하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다만……

○**홍희덕 위원** 다행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동안 유지보수 부분들이 약했고 또 열악하다 보니까 비어 있는 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도 제대로 하고, 임대료도 지금 예를 들면 6만 6000원, 뭐 3만 9000원 이런 식으로 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깎갠 처럼 되어 버린 거지요. 그래서 주변 시세하고 관련해서 낮게는 하되 좀 현실화를 하고 그 대신에 쾌적한 수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보수비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인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주변보다는 싸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 당연하지요.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민간 훈련기관에 돈 대주는 것, 뭐 해마다 문제 덩어리입니다. 사실 취약 근로계층은 취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나 정부가 모두 돌볼 수가 없으니까 민간에 위탁을 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민간 훈련기관 지원사업의 성과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실질적인 취약계층의 취업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또 한 가지, 행정부가 사업 예산을 배정받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국회의 심의 거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성과가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권이라든지 심의권을 무시하기가 일쑤입니다.

제가 차례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누누이 지적해 왔듯이 훈련수료자고용지원센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09년 성과가 아주 미미해서 2010년에는 아예 사업이 집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엉망인 사업이면 아예 사업을 집행조차 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 불용 예산을 우리 국회에는 보고도 하지 않은 사업에다가 써 버렸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썼습니까? 그 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김성순 위원장, 강성천 위원과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 나영돈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훈련수료자고용지원사업의 실적이 다소 저조하여 다른 내역 사업으로, 노숙인이나 결혼 이민자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게 써도 국회에 보고하고 하든지 해야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나영돈** 예,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또한 취약계층 집단상담 운영 및 취업지원사업은 애초 예산보다 1.5배나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2009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취업률이 40%도 되지 않아요.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성과가 이렇게 미미합니다. 또 예산 초과 집행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지원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여기는 취업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단기간 동안에 1인당 100만 원 이상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전문인력이라면 고용부나 민간기관이 허브 역할만 해도 충분할 텐데 이렇게나 돈이 많이 들고 또 그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미약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비롯해서 현황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사·간병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취지는 좋으나 진행절차가 의문스러운 사업입니다.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도 이 사업에 대해 예산 배정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고용노동부가 임의적으로 남은 예산들을 이용해서 진행한 사업이네요. 엄연한 국회 예산결정권 침해입니다.

장관님, 이것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국회가 정한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2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해서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마는 그 이내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사업 안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 소상하게 좀 더 설명 올리고 의견을 잘 구하지 못한 미숙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런데 1명도 취업시키지 못한 기관에다가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돈은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실 관계를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기에 가사·간병사 위탁을 하면서 워크넷으로 입력이 제대로 안되어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산에 미리 입력이 안 된 기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희덕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해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장관님, 유성기업이 직장 폐쇄 91일 만에 정상화되었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조해진 위원** 그런데 이제 쟁점이 되었던 주간 2교대제 도입, 이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는 아직까지 개선방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것 어떻게 될 전망으로 보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은 아마 시간을 좀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을 비롯해서 주야간 맞교대제 방식은 장시간 근로이기도 하고 또 심야 근로로서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야말로 주간 연속 2교대제 내지는 3교대제 이런 식으로 교대제 개편을 통해서 근로시간은 줄이면서 동시에 생산성을 올린다든지 임금에 대한 노사 상호 간의 양보에 의한 조정이라든지 또 시설장비 투자를 통한 인력 추가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도록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권고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우리, 교대제 전환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조해진 위원** 이게 작년에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올해는 결국 시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간 2교대제 전환 지원에 좀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다시 시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 부분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교대제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려면 교대제 개편도 합리적으로 하면서 일자리도 늘어날 때만 지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연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 가운데서 청년층 장려금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조해진 위원** 이것하고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하고 겹쳐서 어느 한 쪽으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게 목적과 대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나름대로 괜찮은 중소기업들에 일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졸 청년들이 막연한 선입견으로 취업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초기에 인턴 형식으로 가서 한번 익히다 보면 ‘아, 이 기업도 괜찮구나’라고 해서 정착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해 가지고 간 사람들의 한 86%는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고 1년이 지나서 보니까 남았던 사람들의 76%가 계속 일하고 있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고, 그다음에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졸 이하 청

소년, 말하자면 취약계층 아주 그런 계층들을 위한 특별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대상과 목적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후자는 좀 집행이 지금 상당히 저조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현재 좀…… 저희들이 시·군·구를 통해서 취약계층들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또 여성가족부를 통해서도 불우 청소년들을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홍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역할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쪽으로 효과,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쪽으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청년층 취업장려금제도는 그대로 별도로 계속 특화시켜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희는 각각 두면서 특성들을 살리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섞어 버리면 두 가지 다 정체성도 모호해지고 또 기업체에서 받아들일 때 너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또 그분들을 안 받을 수도 있고 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취급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진학률이 작년에 61.2%로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통계가 맞다면 이것은 특성화고 취직하고 좀 배치되는 결과가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그 통계를 좀 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해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1년도에는 30%였는데—특성화고 졸업하고 대학가는 비율이—작년에 61.2%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다면 특성화고 원래 취직하고도 많이 다르고 또 특성화고 졸업하고 취업했다가도 또한 2, 3년 다니다가 대학 진학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추세로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인이 특성화고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고졸-대졸 간 임금 격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 가지고, 채용하는 쪽에서는 일을 시켜 보면 특성화고 졸업한 사람들이나 대졸자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서도 실제 임금 대우는 완전히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우리 사회의 편견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판 이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봐 나가게끔 분위기 조성도 하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나와서 취업 경험 없이 진학하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잘못된 설계라고 보아서 취업을 한 뒤에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진학도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미세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위원** 지금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이고 등록금까지 정부가 부담 떠안게 되면 거의 90%, 100%까지 갈 상황이 되면 대졸이 대졸이 아니고 그냥 기초학력, 모두가 이수하는 기초학력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고위관직도 나와야 되지만 그중에 환경미화원도 나오고 온갖 직업들이 다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대학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대졸했다는 것 때문에 일정한 눈높이 이하로는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때 특성화고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대우를 특화시켜 줄 때 그런 학력 인플레이션 문제도 좀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고민해서 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좀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천** 조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범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규 위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 지역 출신 손범규 위원입니다.

실업자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손범규 위원** 거기 직업전문학교에 보면 실업자 교육을 하는데 그 실업자들이 교육받는데 희망직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손범규 위원** 어떤 사람은 미용사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교육과정이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실업자의 자기부담비율이

있어요. 강좌 수강료의 자기부담비율이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 하겠다는 데서는 실업자의 자기부담비율이 전체 수강료의 40%이고 컴퓨터 관련 교육받는다 하면 수강료의 20%를 자기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뭐라고 그러나 하면 똑같은 실업자인데 누구는 40%를 부담해야 되고 누구는 20% 부담해야 되고 이렇게 차등을 하느냐?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는 미용사 교육 같은 것은 직업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받아서 나가면 취업이 잘 되는 반면에 컴퓨터 같은 것은 교육받아도 취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취업이 잘 될 게 예상되는 것은 자비를 좀 많이 받고 취업이 잘 안 될 게 예상되는 것은 자기부담을 좀 줄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데 그것은 좀 합리적인 차등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똑같은 실업자인데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그냥 받게 하고 부담비율은 30%면 30%, 25%면 25% 똑같이 해야 말이 없지 누구는 돈 많이 내고 교육받고 누구는 적게 내고 교육받고, 다 실업자인데.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나랏돈으로 실시하는 훈련인데요. 수요 공급 차원에서 직종에 따라서는 훈련을 받은 인원들이 많이 배출되는 직종이 있고, 즉 훈련을 받아도 넘치는 분야가 있고 어느 직종은 산업체에서 굉장히 선호하는데도 훈련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그 수요 공급의 상황을 보아서 넘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부담을 높여 줌으로써 선택하는 데 참고하게 하는 것이고요.

○**손범규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런 수급 차원의 고려가 있다는 말씀……

○**손범규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요, 직업전문학교 수강 시스템을 보면 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한 군데 기관에서 전국의 모든 직업전문학교의 강사 선임, 강사 자격 심사 또 강사 체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일괄 다 통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 현실에 안 맞는 역기능이 난다 그래서 노동부 고양지청, 노동부 파주지청, 이렇게 노동부 일선 지청에서,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곳에서 이것을 컨트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도 초기에 계획제를 시행한 지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초기에 전문적인 심사 그리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원칙에 따른 집행을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원 위주로 해 왔습니다. 이제는 몇 년 됐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영역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여를 하되 운용상의 문제라든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서 융통성 있게 현실 위주로 실용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끔 역할 분담을 조정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시고요.

직업전문학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규모가 좀 크고, 일반 그냥 학원에서 직업 관계하는 것 있잖아요? 일반 학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직업전문학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정부가 하라고 그래 놓고 지원이 적다, 그러니 아무나 다 하는 일반 학원보다도 더 경영난에 시달리고 어렵다, 지원을 좀 더 해 달라 아니면 일반 학원이 함부로 이 정부의 직업, 내일배움카드제를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좀 조정을 하든지 합리적으로 이것을 조정해 달라,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강성천 위원, 김성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이 이제 직업전문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고용노동부의 지원이 조금 더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또 다른 경쟁기관에서 볼 때는 더 잘 하는 기관이 있는데 직업전문학교라는 그 이유만으로 지원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훈련시키는 직종별로 훈련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위주로 직종에 따라서 지원액을 달리 설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당 기관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화되게끔 그런 방식을 하고자 합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중장비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장비학원에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서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장비학원이 전국에 쪽 있는데 경기도 같으면 여덟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중장비학원에서 교육용 중장비 있잖

야요? 그것 되게 고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취득하려고 돈을 주고 살 때에는 세금 면제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육용 중장비의 기름이, 유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일체 보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일반 운전면허학원 있잖아요? 아무나 다 배우는 운전면허학원의 그 교육용 차량의 취득세는 정부가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또 일반 운전면허학원의 교육용 차량의 유류대를 정부가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면서 실업 교육 그리고 중장비 교육이라는 것은 학원 자체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반면에 숫자도 적고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산업역군이 되고 교육을 상당히 장려해야 되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데인데 지원이 없고, 일반 운전면허학원야 다 배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유류세 혜택도 주고 취득세 혜택도 주고, 이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 반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좀 파악해 보고 또 일반 지원하는 기관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고민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손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경 위원**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안착되어서 취약계층한테 취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업을 지금 보니까 목적하고 수단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에게 수당을 주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위탁기관 지원사업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도 보니까 6개월 이후에 실적을 대부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은 세부집행내역을 보니까 애초에 2010년도에 국회 통과할 때는 참여자 수당 예산액이 140억 7200만 원이었다가 그다음에는 이것은 줄어들었어요. 다른 데로 전용시켜 버리고 65억 3700만 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위탁사업비는 42억 5000만 원이었다가 추가해서 62억 4500

만 원이 됐다고요.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참여자한테 더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진 예산이 위탁사업비에……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대행업체들이지요. 위탁기관 지원사업으로, 이쪽으로 가 버렸다고요. 그 기준도 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가 버렸는데 좋은 일자리를 또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보니까 대부분 6개월 이하짜리가 54% 이상이에요. 6개월 이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아주 조금 일하다가 그냥, 소개만 받고 일 좀 시키다가 그다음엔 끝나 버려요, 일자리가 지속되지 않고.

다시 나중에 보겠지만 똑같은 사람이 또 신청해 가지고 또 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소개했다고.

그래서 이런 식이 돼서는 참 곤란하겠다, 이게 완전히 목적하고 수단이 바뀌어 버린 거지요.

게다가 지금 그러면 이 민간위탁기관이 어떤 데냐 했더니 대부분 민간 인력공급 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위탁기관이 제니엘, 인지어스, 사람인HR, 잡모아 등 아주 전형적인 대형 인력공급업체예요.

이 공급업체들한테 지금 돈 더 주기 위해서 애초에 통과했던 예산까지 바뀌어 갖고는 이렇게 가고 있고 일자리는 별 시시한 것들 지금 주고 있는데, 제니엘한테 간 돈만 하더라도 1년에 200억이 갔습니다. 200억이 넘게 갔어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애초에 공공고용센터를 강화해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라도 더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기대를 모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사실은……

○**이미경 위원** 짧게 얘기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우리 직원이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초기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직접 수행할 수 없어서 민간기관과 함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 많이 보완을 해서 고용센터에다가 취업성공지원팀을 뒤서 우리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기관에서의 사업비는 그 안에 혼

련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직접 가져가는 것은 특히 일부 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정선 위원께서도 자료 내놓으라고 했는데 자료 별로 없다, 아직 초기여서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자료 받아 보니까 어떤 일자리인지도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누가 했는지 이런 정도로 해서 이 사업의 일자리 질에 대해서도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어떤 교육을 어디서 시켰는지 이런 것, 다시 자료 다 정리해 갖고 다시 있는 자료를…… 지금 교육도 시킨다고 얘기했지요? 자료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 주세요. 아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이것 국감에서 다시 짚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민간 인력공급업체들이…… 이런 것은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놀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어제 한진중공업 청문회 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한진중공업은 그 자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에는 사실은 경영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금 47.8%가 불용되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이것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지금 어쨌든 정리해고를 막아야 되는 것이 노동부의 커다란 책임인데 겨우 절반밖에 안 썼다……

정리해고 같은 것을 막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 들어가서 막는 데 좀더 도움이 되자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리해고 문제가 상당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은 47.8%밖에 안 됐다, 그리고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찌고저찌고 해서 그렇다면 기준을 좀 바꿔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지적에 제가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극복이 되면서 고용유지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수요가 좀 줄었다는 측면도 있고, 동시에 저희들이 고용유지 지원의 요건 기준들, 지원하는 기준들을 좀 낮추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 지원 제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해당 근로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면 다시 고용유지지원금이 47.8%가 불용됐다 하는 것은 문제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충분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갖고 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불용 문제는 경제 사정의 변화라는 고용유지 신청……

○**이미경 위원** 경제 사정은…… 뭐, 어디서 경제 사정이 나쁘다고 난리고 그러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 한다면 언제는 경제 사정이 나빠서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경제 사정이 그런 대로 좋아져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안 써졌다고 하고, 이런 얘기는 지금 납득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는 많은 여기하고 비교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제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는지 이것 연구시키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불비한 점이 있다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지요.

이것 지금 예산 잡아 놓고는 한 50%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 정리해고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노동부가 제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 저요?

아까 얘기대로 그러면 사업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노동자한테 직접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 방안이 이 유지지원금 제도가 아니고 다른 거라면 다른 것으로 예산을 더 주든지, 안 그러면 이 제도 가지고 더 만들든지……

이름이 번듯해서 좋아서 남들은 다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고 어제 심지어 위원님들조차도 이 돈 쓸 수 있는가 하고 기대했는데 못 쓴다,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꼭 검토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래서 제도 부분

은 효과성이 나도록 거의 원점에서 출발하다시피 새롭게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결산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사정 변화, 대단히 빠른 변화라는 측면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결산은 그냥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교대제 전환지원금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좋은 제도를 지금 노동부가 많이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고 있는가, 왜 불용이 났는가, 이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고 눈에 띄는 그런 제도이고 제목만 바라보면 여기에 기대 거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도 59.6% 불용이에요, 60% 가까이. 지금 유성기업 노동자들 ‘밤에 잠 좀 자자’ 하고 파업하다가 다 잘려서 길거리에 나왔어 있잖아요.

지금 맞교대하는 데가 제조업은 64%, 그다음에 전 산업적으로는 64%예요. 일본이나 유럽 등 다 없어졌잖아요, 거의 다 90년도에? 그러면 우리도 지금쯤은 맞교대 없애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동부가 정책을 만들고,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될 제도, 정책이 뭔지 찾아야 되고, 그 중의 하나가 여기 있는데 지금 그야말로 불용이 60% 가까이 된다, 이것 한번 제도 개선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보십시오. 지금은 사업자한테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도?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나마 저임금이니까 돈 더 받으려고 그렇게 가는 것은 반대다 이러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식의 방식을 찾아서라도……

저 혼자 생각해 봤을 때는 한 파트는 그야말로 2조 3교대로 간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돈 더 받겠다는 부분은 맞교대로 좀 남겨 놓는다는지 이렇게 해서라도 하라고 하면 장려금을 더 줘서 몇 년도까지는 맞교대 없는 사업장을 만들겠다, 맞교대 제로 사업장을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하시라고요. 장관님 계실

때 좀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의 장시간 근로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미경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거기에다가 꽤 규모가 있고 이런 사업장에서도 교대제 근로 부분에서 낙후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발동을 확실히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성과가 나도록 독려를 하고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제도도 보완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예, 이것 60% 불용 안 나오도록 좀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도 제도가 개선되면 제도 개선하든지, 안 그러면 더 독려해서 하게 하든지, 어쨌든 맞교대 없는 대한민국 만드는 데 이 제도가 도움이 된다면 확실하게 더 많이 이용돼서 내년도는 불용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대로 효용성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를 마쳤는데요.

보충질의로……

아, 이법관 위원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법관 위원** 장관님, 어저께 12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괜찮습니다.

○**이법관 위원** 원래 어제 차수 변경해서 더 했어야 되는데……

취업자에 대한 계좌제라고 장관님이 전문가라 그러시는 것 같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닙니다.

○**이법관 위원**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직업학교가 전국에서 이천 몇 개가 있던데 꽤 더군요, 보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도의 내용은 좋은데, 제도라는 게 그 나라 현실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데에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

도 들고……

이것 우리 장관님보다 실무적으로 잘 아는 분이 나오셔서 좀 설명도 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파악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보다 실장이 더 잘 알고 실장보다 국장이 더 잘 압니다.

○**이법관 위원** 그러니까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얘기하세요, 계급에 관계없이, 직위에 관계없이.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노동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하미용** 문제가 없지 않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법관 위원** 아, 다행이네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가 할말이 없을 뻔했는데……

한번 이것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좀, 실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하미용** 그간 직업훈련 부분이 물량 배정 방식으로 정부가 훈련기관을 지정을 하고 훈련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서……

○**이법관 위원** 조금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실까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하미용** 훈련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서 훈련생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훈련 기간도 길고 또 직종도 정말 산업 수요에 맞지 않게 공급자 위주의 그런 훈련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이것은 아니다,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직종도 좀 넓히고 또 산업현장의 수요를 좀 반영하자, 훈련받는 사람들의 초이스를 좀 넓히자, 그리고 훈련기관들끼리 좀 경쟁을 유도해서 훈련의 질을 높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09년도부터 시범 실시를 해서 올해는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가 태어난 지는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간 시범 실시하면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제도가 원래 시도했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법관 위원** 제가 좀 조언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야의 전문 직업학교들이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하미용** 예.

○**이법관 위원** 그쪽 실무자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 보셔 가지고, 우리나라 현실에 근로자들의 행태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개선하실 때 좀 얘기를 잘 들어서 그 개선점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하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이미경 위원이 너무 상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조한 집행 성과가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장관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구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집행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농어민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당초 예산이 81억…… 이게 8100만원…… 8100만 원입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8100만 원입니다.

○**이법관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도 지원이 안 됐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지원도 안 되고 왜 이러지요? 4100만 원으로 줄어들어 갖고…… 이것 뭘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게 FTA 농어민특별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법관 위원** FTA가 실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농어민이 없어진 그런 결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법관 위원** 아, 이게 그렇게 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그다음에 건설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선도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이 부분 양해

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좀……

○**이법관 위원** 예, 그러세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한창훈** 인력수급정책관 한창훈입니다.

건설근로자들이 대부분 일용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용직으로 유도해 보려고 기업들을 좀 지원을 통해서라도 상용직화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법관 위원** 이게 가능한 겁니까? 건설근로자가 상용직……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한창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 예산이 제대로 많이 집행이 안 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법관 위원** 글썄, 이것은 좀 별로…… 건설근로자가 상용직화된다는 게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자가?

하여간에 이것에 대해서 하시려면 제대로 실적이 나도록 효과 있게 하시고 안 그러면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한창훈**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고용구조 개선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은 대부분이 상용직 건설 종사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재도 적게 생기는데 우리는 유독 임시 일용 위주다 보니까 재해율도 많이 생기고 해서 조금 의욕적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마디만 덧붙이면 고용유지지원금 부분은 사실은 경기 상황에 맞게 기민하게 지원 수준이라든지 요건을 바꾸어 나가야 되고 또 사중손실 효과가 적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률만 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한 차례 질의를 마쳤습니다.

강성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강성천 위원** 예.

강성천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산재 문제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재해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지요? OECD 국가 중의 끝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데 상당히 높은 실정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망 재해율은 확실히 높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은 게 건설근로자들 이쪽에 굉장히 높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이게 지금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대충 그 정도됩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건설 쪽에서 교육이, 안전 교육이 상당히 미흡해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제안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같이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그 공제회 보면 지금 상당한 기금이 쌓여져 있는데 그 기금을 교육하는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요. 건설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추락사, 감전사 이런 걸로 상당히 많은 재해를 입고 있는데 그 재해를 위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그 기금을 다른 데 무슨 보상이나 이런 데 쓰자고 할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데, 안전교육을 하는 데 상당부분 써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건설공제회는 건설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또 그런 기금이 다 보니까……

그렇지만 건설 관련 전문기관인 만큼 산재 예방 교육 부분도 할 수 있으면 하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예산에 쓴다고 하면 모르지만 건설근로자들의 안전교육하는데 그 교육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가 거기에 참여를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고용노동부가 그쪽의 이사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해서, 지금 우리가 산재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그리고 장관님, 체당금 지급액이 지금 얼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 3000억 가까이, 2600억 정도됩니다.

○강성천 위원 2600억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폐업한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당금을 지급해 주고 그리고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체당금 제도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그런데 사업주에게 회수 못한 체당금 누진액이 2010년 말에 보면 8380억에 이르는데 이 회수가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체당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도산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해서 퇴직금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도산된 사업장이라서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해서 미수납액이 계속 누적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난해 보면 9901억 1600만 원이 징수 결정됐습니다. 이 중의 1082억 3600만 원이 수납되어서 수납 비율이 10.9%에 그쳤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또한 2009년 수납률을 보면 10.1%로 이렇게 낮은데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 숫자 저희들이 계상한 기준이, 징수결정액은

그전에 있던 미수금 이월해서 누적해서 보게 되고요. 수납액은 해당 당해연도에 받은 것만 계상하다 보니까 비교하는 좌측, 우측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바로 수평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원천적으로 임금채권 보장제도 자체가 외국도 그렇지만 상당 부분 이 부분들은 미수되는 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래도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수납되는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아시겠습니까 마는 변제금 회수율이 선진국들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회수율이 누적으로 40% 정도되는데요. 일본이 19%, 영국도 19%,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해서 나름대로 다른 나라보다는 안정적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주된 수입원이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하고 변제금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기금의 안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미수 체당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공조를 통해서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악하고 회수전담반을 꾸리는 등 노동부가 회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한 것 아닙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의 취지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해서 체당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사행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하고 하여간 기금 재정수지 악화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조금 아까 일자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마무리 좀 짓도록 할게요.

또 보니까 심리안정 지원프로그램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래요.

실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출장까지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는데 17억이나 썼다고 합니다. 2010년에 3만 2600명이나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진이라든지 쌍용, KEC, 어디든 노동자들이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이 사업 역시 국회 예산 확정과 상관없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량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사업인데요. 일자리 정보 제공 사이트와 연동을 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겠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나 실적이 참 형편없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0.002%, 1000명 중 2명 취업이라는 이런 성적표로 기억을 하고,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는 아니고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일용직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그런 조직에 그냥 돈 갖다 주는 겁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지적했던 민간훈련기관 지원 사업은 그 취지와 다르게 정말 부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도 없을 뿐 아니라 국회의 심의 없이 고용노동부 자의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가 하면 내부에서 준비한 뒤 국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사업 첫째 연도부터는 좀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사업 첫째 연도부터 대대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든지 이 모든 일이 장관님이 차관으로 계실 때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 예산권을 우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국감에서도 계속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데 매년 반복돼요. 그래서 이번 예산 소위 때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사업들, 세부 사업별로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 집행의 근거, 출처들을 좀 제출하시고 2010년 구체적인 성과와 2011년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사업을 하려면 똑바로 잘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근차근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선진국에서는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급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예산권 침해 부분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내역 사업입니다. 단위 안의 내역 사업이기 때문

에 이 부분들은 행정부에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가 되는데, 다만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지적이 좀 무리한 점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어저께 바로 이 자리에서 환노위에서 진행된 한진중공업 그것 잘 보셨지요, 청문회? 보셨습니까?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예.

○홍희덕 위원 내가 오늘 왜 중앙노동위원장님한테 어제 일을 거론하느냐 하면 여야 위원님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진중공업이 어쨌든 부산 지노위에서 기각은 당했다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부당해고가 어저께 대부분의 우리 위원들의, 밝혀진 것에 의하면 정리해고할 만한 도무지 그런 타당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 동종 업종 근로자의 임금 또 그냥 170명 해고시키면서 그 이튿날 배당 잔치, 현금 3년간 440억 배당잔치, 이렇게 하고도 부산 지노위가 이 사건을 기각시킨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의아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중노위로 당연히 올라왔을 텐데 언제쯤 그 심리를 하는 겁니까? 좀 빨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예, 지난 6월 9일 날 중노위에 제출이 됐는데……

○홍희덕 위원 6월 9일 날이요?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예. 그랬는데 지금 근로자 측에서 그 답변서를 내고 추가로 또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또다시 사용자 측의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다소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심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 심문회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노사에게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 또 실제 심문회의에서도 그런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홍희덕 위원 하여튼 중노위에 석연치 않은 부산지노위의 기각 판결에 대한 그 우려를 전하면서요, 하여튼 중노위의 정말 공정한…… 우리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의 근거·목적……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정말로 기델

수 있는 기관인지 중립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노동위원장 정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위원이 이 사건을 배정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제기됐던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할까요, 이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과 현안질의 그리고 고용노동부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대체토론을 실시한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홍영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성천 위원, 이범관 위원, 이정선 위원, 이미경 위원, 홍희덕 위원님 등 6인의 소위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과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서는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부 소관 및 기상청 소관 그리고 고용노동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과 환경부 소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12인)

강성천	김성순	김용구	손범규
이미경	이범관	이정선	정동영
정진섭	조해진	홍영표	홍희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전문위원	원창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관	유영숙	영	숙
차관	관	윤종만	종	만
기획조정실장		정연용	연	용
환경정책실장		송재희	재	희
녹색환경정책관		이찬필	찬	필
환경보건정책관		이재현	재	현
기후대기정책관		강형신	형	신
물환경정책국장		오종규	종	규
상하수도정책관		백규석	규	석
자원순환국장		남봉현	봉	현
감사관		유연철	연	철
국제협력관		김영훈	영	훈
대변인직무대리				
기상청				
청장	장	조석준	석	준
차장	장	조하만	하	만
기상선진화추진단장		Kenneth C. Crawford		
기획조정관		이일수	일	수
예보국장		진기범	기	범
관측기반국장		엄원근	원	근
기후과학국장		조주영	주	영
기상산업정보화국장		박정규	정	규
수치모델관리관		이우진	우	진
지진관리관		김영진	영	진
국립기상연구소장		권원태	원	태
부산지방기상청장		남재철	재	철
광주지방기상청장		김명수	명	수
대전지방기상청장		김낙빈	낙	빈
강원지방기상청장		육명렬	명	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원민	원	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승	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윤승준	승	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홍	우

국립생물자원관장	김	용	진
국립환경과학원장	김	삼	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	채	필
차관	이	기	권
고용정책실장	이	재	갑
노동정책실장	조	재	정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노동시장정책관	이	재	홍
인력수급정책관	한	창	훈
직업능력정책관	하	미	용
고용평등정책관	권	용	순
고용서비스정책관	나	영	돈
근로개선정책관	박	종	길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	기	섭
노사협력정책관	전	운	배
공공노사정책관	권	혁	태
정책기획관	신	기	창
국제협력관	심	경	우
대변인	정	지	원
감사관	최	수	홍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이	성	기
충북지방고용노동청장	안	경	덕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장	화	익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이	수	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송	문	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이	재	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	종	태
중앙노동위원장	정	종	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	영	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	영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	현	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	성	규
한국고용정보원장	정	철	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류	시	문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허	병	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	운	기